



2024. 9. 11.(수) 10:00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 제279회 부산시의회[임시회] -
시 정 질 문 답 변 서

부 천 시

답 변 순 서

■	보	좌	기	관		9				
■	기	획	경	제	실	 17				
■	행		정		국	 37				
■	문	화	교	육	국	 47				
■	복	지	위	생	국	 65				
■	도	시	주	택	환	경	국	 71		
■	도	시	균	형	개	발	추	진	단	 85
■	교	통	건	설	국	 93				
■	보		건		소	 109				
■	공	원	사	업	단	 127				

목 차

【보좌기관】

□ **윤병권, 손준기, 이종문 의원** 11

○ 부천 호텔 화재 사건 관련

【기획경제실】

☐	장성철, 박내경, 이학환, 최옥순 의원	19
	○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관련	
☐	장성철 의원	25
	○ 부천시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보상 및 의미있는 예산 활용 요청의 건	
	○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혈세 절약방안 점검 결과 요구	
☐	양정숙 의원	28
	○ 예산편성 시 유지관리비 관련	
☐	박혜숙 의원	29
	○ 부천시 경제정책 관련	
☐	김 건 의원	32
	○ 부천시 근로복지시설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료 징수방안 마련	
☐	최초은 의원	34
	○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	최은경 의원	35
	○ 구)부천소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관련	

【행 정 국】

☐ 곽내경, 양정숙 의원	39
○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 관련	
☐ 이학환 의원	41
○ 부천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 최초은 의원	42
○ 역곡공공주택지구 행정구역 조정 관련	
☐ 임은분 의원	44
○ 구청 민원처리 효율화 관련	

【문화교육국】

☐ 김선화 의원	49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 정창곤 의원	51
○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 장성철 의원	52
○ 부천시 레지던스룸 화재 안전 대책 마련 및 청년예술인 임대 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약속 이행 요구의 건	
○ 부천아트센터 관련 지방채 상환계획 및 시민을 위한 활용 방안	
○ 부천종합운동장 지역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 도입 확대 요구	

☐ 김미자 의원		57
○ 중동 IC 하부공간 관리 관련		
☐ 양정숙 의원		58
○ 부천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 요청		
☐ 최의열 의원		59
○ 부천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경영합리화 모색		
○ 부천시박물관 위탁관리 전면 재검토		
○ 효과 없는 문화사업(부천세계비보이대회, 부천국제문학상 등)의 일몰을 통해 기존 사업의 질적 성장 도모 관련		

【복지위생국】

☐ 윤병권 의원		67
○ 부천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관련		
○ 노후화된 노인정 환경개선 관련		
☐ 곽내경 의원		69
○ 경기도 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 공간 마련		
☐ 양정숙 의원		70
○ 우리 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관련		

【도시주택환경국】

□ 윤병권 의원	73
○ 소방안전관리자 처우 개선 및 다세대주택 안전관리 관련	
○ 부천시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화 관련	
□ 장성철 의원	77
○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및 지원 대상 확대 요구	
□ 김 건 의원	79
○ 관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 상동 540-1 공공기여 진행 경과	
○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대응 관련	

【도시균형개발추진단】

□ 장성철 의원	87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	
□ 손준기 의원	89
○ 상동 영상문화단지 관리 및 활용 관련	
○ 부천대장신도시 가이설 송전철탑 관련	
□ 양정숙 의원	91
○ 관내 업체 우선구매 관련	

【교통건설국】

□ 윤병권 의원	95
○ 바닥형 보행신호등 점검 관련	
□ 곽내경, 양정숙, 이학환 의원	96
○ 부천시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빌딩 근처 주차구역 관련	
□ 김미자 의원	99
○ 포트홀 관련 시민홍보, 보수 관련 개선방안	
○ 중앙분리대(차단봉 포함) 파손 및 방치로 인한 안전·미관 관리 관련	
□ 최옥순 의원	105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위치 개선 요구 관련	
□ 임은분 의원	106
○ 사유지의 도로 건설 문제	
○ 사유지 점멸등 이전 문제	

【보 건 소】

□ 윤단비 의원	111
○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만성 적자 및 운영구조 개선 관련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약제비 미지급 관련	
○ 부천 더블유(W)진병원 강박 환자 사망사고 관련	
□ 손준기 의원	120
○ 부천시보건소 후보지(여월동→소사경찰서부지) 변경 사유	
□ 이종문 의원	123
○ 부천 호텔 화재 사건 관련 - 공공의료원 설립	

【공원사업단】

- **손준기 의원** 129
 - 기후 위기 대응, 열섬현상 완화, RE100 실천 등을 위한 부천시 옥상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
- **양정숙 의원** 131
 - 소사대공원 확장 공사 및 한미재단 4-H훈련농장 관련
- **최옥순 의원** 132
 - 평지둘레길 조성 요청 관련

보좌기관

□ 질 문 : 윤병권, 손준기, 이종문 의원

○ 부천 호텔 화재 사건 관련

[윤병권 의원]

- 시 차원 유관기관 합동 숙박업소 안전점검 전수조사
- 경기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유사 지원사업 검토

[손준기 의원]

- 숙박업소에 대한 재해·재난 안전 시설물 관리, 차후 추진 방안 모색

[이종문 의원]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질적인 재난대응 조치(회의록 제출)
- 합동분향소 미설치 사유
-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점검과 화재안전인증제도 도입 검토

□ 답 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응 조치】

- 2024. 8. 22. 19:39경 호텔 화재사고 발생과 함께 시에서는 즉시 상황을 전파하여 20:58에 현장 응급의료소와 21:30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각각 설치하였고, 22:05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피해자 지원과 빠른 사고수습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였음.
- 23일 01:20에 대책본부 실무반장 외 실·국·소·단·원미구청장을 소집하여 1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3일 08:00 2차 회의에서 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 결정하였으며, 이후 매일 09:00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가족과 피해자의 장례지원 및 피해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22일 23:00 사망자 및 23일 00:00 부상자에 각각 병원별 1:1 전담 공무원을 현장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장례·입퇴원 등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의 불편사항을 확인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였음.
- 또한, 화재로 인해 직·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부천시 고문변호사 3명을 상담위원으로 구성하여 상속·피해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지원 안내서를 제작·배부하여 화재보험·시민안전보험의 문의처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할 만한 사항 등을 능동적으로 안내하였음.

- 아울러, 재발방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완강기 교육을 9월부터 실시해 나가고, 화재현장에서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방연마스크 확보, 대피로를 안내하는 스마트 화재경보기 설치 등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중임.

※ 대책본부 회의록 등은 별도 제출

【유가족을 위한 합동분향소 등 추모시설 미설치 사유】

- 유족 측에서 조용한 장례를 원하셨고, 취재진과 외부인 접근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대단히 꺼리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합동분향소 설치 또한 요청이 없는 등 이런 제반 분위기를 고려하여 합동분향소 설치하지 않았음.
-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8월 31일까지 애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였고,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획된 행사 및 축제에 대해 연기 및 축소 등을 시행하였음.

【호텔 화재사고 관련 숙박시설 특별 안전점검 추진】

- 2024. 8. 22. 중동에 소재한 숙박시설(호텔) 화재로 사상자 19명(사망 7명)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재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내 유사시설인 숙박시설 및 고시원 전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관합동 긴급 화재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

구 분	숙박시설	고시원(고시텔)
점검대상	176개소	213개소
점검기간	2024. 9.~ 10.	2024. 11.~12.
점검방법	건축, 소방, 전기, 위생 등 분야 전문가 참여 민관 합동점검	

- 해당 점검은 각 분야별로 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및 위법·부적합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소유자(관리자) 요청 또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자문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점검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화재취약 숙박시설 및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및 방화문 설치 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강화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음.

【화재안전 인증제도 도입 검토】

- 화재보험협회에서는 사고 호텔과 같은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고 소방시설 등의 관리상태가 우수한 건물을 위험관리 전문가 심의를 통해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하는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운영하였음.

* 특수건물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 근무 또는 거주하는 시설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숙박시설, 병원, 공연장, 판매시설 등)

- 화재보험협회의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검토】

- 경기도의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사업’은 2018년 11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이 발생한 ‘종로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천소방서에서는 관내 고시원 16개소 및 산후조리원 1개소 등 총 17개소를 지원하였음.
- 시에서는 국토교통부·경기도와 함께 매칭하여 2020년부터 「건축물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보강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로서 가연성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화재취약요인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에 한함

- 사업추진 이후 화재취약 건축물 총 48동에 대해 보강완료*하였으며,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39동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학원 및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9동은 가연성 외장재를 준불연 외장재로 교체한 바가 있음.

< 부천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실적*>

구 분		계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3층이상, 스프링클러설치				필로티건축물, 외장재 교체			
			노유자 시설	의료 시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학원	고시원	목욕탕	산후 조리원
보강 완료	2020	2	2	-	-	-	-	-	-	-
	2021	4	4	-	-	-	-	-	-	-
	2022	28	15	2	5	-	4	2	-	-
	2023	10	6	-	2	-	2			
	2024	4	2		1		1			
	합계	48	29	2	8	-	7	2	-	-

- 금번 중동소재 숙박시설 화재사고를 계기로 일반숙박시설 및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음.

【향후 추진 방안 :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시설 확대 건의】

- 시에서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 등의 건축물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3년 주기로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법규준수, 기능유지, 구조안전, 화재안전에 대한 정기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취침 등으로 인해 화재인지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 용도만 한정되어 있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사용자 밀집도가 높아 대형화재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1항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용도에 일반숙박시설도 추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음.

현행	개정안(신설)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4 (생략)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의 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기 획 경 제 실

□ 질 문 : 장성철, 박내경, 이학환, 최옥순 의원

○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관련

-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의 당위성 및 실효성이 있는지?
-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 부천시의 재정여건 및 인구감소 현황을 고려할 때 시정연구원 설립이 필요한지?
- 사업비 및 인건비 예산의 적정성, 향후 인력 규모 및 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
- 인력 채용에 대한 우려 및 처우 검토
- 대학 네트워크 등 대체 조직 운영 방안 검토

□ 답 변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당위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은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제안(’22. 7. 29.) 되었으며, 지방연구원법 개정(’22. 10. 27. 시행)으로 시정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설립을 본격 검토하게 되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이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복잡하고 급속히 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의사결정 지원 체계로써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다른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실태와 문제점, 주민의 요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 부천시정연구원을 통해 우리 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외부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자들이 특정 연구과제가 끝나면 더 이상 관련 연구를 지속하지 않거나 우리 시의 필요와 방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연구자가 참여해야하는 비효율성이 있음. 반면 자체 연구원을 운영하면 연구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연구 과제에 대한 수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도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마주치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즉각적인 실태분석과 연구가 필요함. 시정연구원을 통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아울러, 현대사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시정연구원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기초연구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활용이 가능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
- 기초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함. 이러한 데이터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인구통계, 경제활동, 주거환경, 건강상태 등

【연구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에 대하여】

- 「지방연구원법」 개정 시행('22. 10. 27.)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절차에 대한 안내 공문*을 개정법 적용 대상 지자체에 전달하였음.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밝히며, 지방연구원 설립 시 타당성 검토 절차는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함.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699호, '22. 6. 10.)
- 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출연기관 설립 절차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제외한 것임.
- 이에, 타당성 검토 항목을 준용하여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음.
- 부천시정연구원의 설립 규모(정원, 조직구성 등), 수행사업,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음.

○ 지방연구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연구원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공청회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아울러 정책 의사 결정을 위한 지원기구로써 시정연구원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설립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분명하여 설립 여부에 대한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음.

-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 반영함.

• 인력 운영의 경직성 우려에 따라 연구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행정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 파견인력으로 운용하고 민간사무실 임차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활용하겠음.

- 시민들의 필요를 반영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자체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운영도 계획하였음.

※ 시민 참여 연구, 시민 제안 연구 등 운영

【부천시의 재정 여건 및 인구감소 현황을 고려할 때 시정연구원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분석할 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중요한 지표임. 다만, 신규 정책 수립 시에는 가용 자원의 규모와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부천시는 2024년 본예산 기준 2조 4,148억원 규모로 경기도 내 6위, 2024년 7월말 기준 인구 수 77만 3천명으로 경기도 내 6위에 해당하는 대도시임.

- 시정연구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18.2억원이며, 부천시 예산 규모 2조 4,148억원의 0.075% 수준으로, 부천시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업 규모라고 보기 어려움.

○ 부천시 인구는 2010년 87만 5천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7월말 기준 77만 3천명 수준이나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인 인구 50만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인구감소 현상과 시정연구원 설립의 상관관계는 분명하지 않음.

○ 다만, 인구수는 정책 수립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표임. 인구 변동은 모든 정책과 연동되어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구 데이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을 통한 장래 추계 산출 등 관리가 필요함.

- 인구수와 같이 여러 정책과 연동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분석이 필요한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 시정연구원 운영이 필요함.

【사업비 및 인건비 예산의 적정성, 향후 인력 규모 및 예산 증가 우려에 대하여】

○ 지방연구원은 지자체 정책에 대한 학술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학술연구의 특성상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의 원가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됨.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구성 >

구 분	내 용	비 고
① 인 건 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적용	연구원 예산으로 집행
② 경 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③ 일 반 관 리 비	인건비, 경비 합계액의 6% 미만	절 감
④ 이 윤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 미만	
총 원 가	①+②+③+④	-
⑤ 부 가 가 치 세	총 원가의 10%	절 감
총 예 산 액	①+②+③+④+⑤	-

- 부천시 정책연구용역심의 자료(2020~2022년)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비 구성은 인건비(69%), 경비(17%), 일반관리비(4%), 부가가치세(9%), 이윤(1%)임.
-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소요예산은 18.2억원*으로, 사업비와 매칭되는 학술연구용역의 항목은 경비에 해당하며, 법인 설립 비용인 기본재산을 제외한 설립 소요예산 중 사업비 비중은 16%로 학술연구용역의 경비 비율과 유사한 수준임.

* 기본재산 1억, 인건비 4.2억, 사업비 2.9억, 경상비 3억, 예비비 0.6억

- 부천시정연구원의 정원은 24명으로 초기 투입예산 부담 경감, 연구원 운영 안정화에 따른 단계별 인원 충원 계획에 따라 초기 12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계획함.
 - 연구원의 직급과 보수기준은 타 지방연구원의 신규임용 자격 기준을 비교하여 구성하였으며, 인건비 추계는 2024년 공무원 보수기준표에 지방공공기관(출연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3.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작년과 비용추계가 달라진 사유는 ①설립년도의 비용 추계 기간* 차이 ②공유재산 무상사용계획에 따라 사무공간 임차비 감액 ③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소방 등 안전관리 비용과 냉난방기 구입비 증액 등에 따른 것임.
- * (2023년도 조례안) 2024. 1.~12. (2024년도 조례안) 2025. 7.~12.
- 「지방연구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임원·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정관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요불급한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으며,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연동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서 확인 등을 통해 지방연구원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이 가능함.
- *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함

【인력채용에 대한 우려 및 처우에 대하여】

- 기초단위 지방연구원의 인력은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으로 구분하며, 채용에 대한 내부 규정에서 연구인력은 통상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외 인력으로는 위촉 연구원이나 기간제 연구·사무보조인력을 운용하고 있음.
 - 부천시정연구원 인력은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으로 구성되며, 정원내 연구인력 직급을 선임연구위원(박사급), 연구위원(박사급), 연구원(석사급)으로 구분하고 운영 필요에 따라 정원외 인력으로 박사, 석사, 보조인력 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임.
 - 정원 내 인력의 보수기준은 타 지방연구원의 신규임용 자격 기준을 비교하여 구성하였고, 정원외 인력의 보수기준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부천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구성할 계획임.
-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고시함

- 인력 채용은 임원과 직원의 채용 절차를 구분하며, 연구원 내부 규정으로 채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임원은 원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상근직인 원장만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근직인 이사와 감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원장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경우 원장 채용에 대한 내부 규정에서 채용공고, 추천위원회 심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위원회 구성은 시·시의회·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임.
 -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음.

【대학 네트워크 등 대체 조직 운영방안에 대하여】

- 「지방연구원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지방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감사원 특정감사 시, 지방연구원을 법인격 없는 단체형태로 설립·운영하는 사례와 유사 연구를 시(市) 산하기구 형태로 설립하거나 관내 특정 대학과 협약을 맺고 대학 내 산하기구 형태로 연구를 설립한 사례를 지적하였음.
-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연구용역 발주 시 법적 제약이 있으며, 계약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적합하지 않음.
- 부천시정연구원은 설립 초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명(원장 1, 연구인력 11)으로 운영하므로, 시에서 필요한 연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위촉직 연구원 운영 외에 관내 대학, 연구소, 그 밖에 협업이 가능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 질 문 : 장성철 의원

- 부천시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보상 및 의미있는 예산 활용 요청의 건
 - 부천페이 선수금 정기예금 운용으로 세입을 확보한 생활경제과에 대한 보상과 확보된 세입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의미있게 활용
 - 신뢰를 상실한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
 - 현재 진행 중인 시민충전금 부당이득 환수 소송에서 승소 당부

□ 답 변

【부천페이 선수금의 정기예금 운용으로 세입확보 관련】

- 우리 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국·도비 보조금이 축소되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선수금 계좌의 유희자금을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운용하고 있음.
- 2024년 현재 10개 정기예금 계좌에 약 130억원을 운용 중이며, 올해 기 세입처리한 금액 포함 약 5억원의 이자세입 창출이 예상되며, 이자세입 창출에 기여한 해당 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음.
-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제4조의 3(이자수익 등의 처리)에 따르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겠음.

【운영대행사 계약해지 관련】

-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지역화폐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 발행권자로서 법률, 조례 등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부천페이 플랫폼 운영대행사는 코나아이 컨소시엄(코나아이 주식회사, 비즈플레이 주식회사)으로, 2022년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공동운영 대행사로 선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 시도 개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3년(2022. 9. 15. ~ 2025. 9. 14.)임.
- 코나아이 컨소시엄은 플랫폼 운영대행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크(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로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비용은 없음.
- 협약기간 중 운영대행사를 변경할 경우, 시스템 운영비, 운영대행수수료 등 많은 추가 비용과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향후 경기도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시, 현 상황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청구 소송 관련】

- 우리 시는 부천페이 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환받기 위해 2023년 5월 부천페이 플랫폼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를 상대로 이자수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4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으며, 2024. 9. 12. 5차 변론을 앞두고 소송수행자 간 준비서면에서 요구한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민의 소중한 충전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부천시민의 이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소송수행에 임하고 있음.

□ 질 문 : 장성철 의원

○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혈세 절약방안 점검 결과 요구

- CCTV 교체 계약 입찰방식 변경(제3자단가계약 →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를 참고해서 각 부서별로 개선한 결과 요구

□ 답 변

-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에 따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계약 방법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함.
 - 관련규정: 「조달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천시 노후 방범 CCTV 성능개선 사업은 해당 사업에 기존 노후 물품의 철거 공사가 포함된 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들은 철거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로 진행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 이에 계약전담부서에서는 위 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조달물품 구매 계획 수립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상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물품 규격, 인도 조건 등)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불일치 시 입찰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었음.
- 앞으로도, 계약방식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한 대표적인 위 사례를 사업 부서에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개선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으며, 계약전담부서에서도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계약방식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하겠음.

□ 질 문 : 양정숙 의원

○ 예산편성 시 유지관리비 관련

- 예산편성 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각종 유지관리비는 삭감 없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 예산 삭감 관련하여 유지관리비의 편성방법 및 삭감 기준은?
- 유지관리비 삭감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방안은?

□ 답 변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비용 예산 삭감 및 대책】

- 의존재원인 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필수 사회복지비 등 법정·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전재정기조 하에 '24년도 예산편성은 법정·의무지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사업에 대해 10~40% 절감(자체재원 사업 우선 적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시설 유지관리비용도 부득이하게 조정하였음.
- 그러나 동절기 제설작업, 지하차도 침수방지 진입차단시설 확충 등 시민 안전 관련 사업과 긴급한 도로 복구 사업비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였고,
- 노후시설 유지보수, 도로 포장, 공원·녹지대 정비 등 일부 삭감사업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의 사업 추진 우선순위 설정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시설 관리(정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 또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 유지관리 예산 13.9억원 (도로 유지 및 정비공사 11억, 동절기 제설작업 2.9억)을 최우선 반영하였고, 외부재원(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도 추가 확보하여 보도 환경정비, 공원 노후시설 정비, 녹지대 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향후 '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유지관리 소요예산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질 문 : 박혜숙 의원

○ 부천시 경제정책 관련

- 매년 늘어나는 지방채 관리(상환) 대책
- 계속 낮아지는 재정자립도 대응 방안
- 신규사업 재원 마련 방안
- 세수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방안
- 부천아트센터 운영비 지출에 대한 대책

□ 답 변

【지방채 관리(상환) 대책】

-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 시설확충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2024년 1회 추경 기준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는 2,657억원 정도임.
- 우리 시는 그동안 부천아트센터, 송내사회체육관, 수주도서관 건립 등 시민 편익 증진사업과 웹툰융합센터, R&D종합센터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그리고 하우로·옥련지구 도로개설, 공영주차장 조성 등 미래관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해왔음.
- 또한 안정적인 채무관리 및 상환을 위해 시중은행 대신 정부공공자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낮은 금리(이율: 0.75~3%)로 지방채를 활용하고 있음.
- 향후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은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연도별·차입선별 상환조건 및 상환계획에 따른 순차적 원리금 상환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음.

【재정자립도 대응 방안 및 신규사업 재원마련 방안】

- 재정자립도는 자체 재원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 수입 증가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0.9%('20.)에서 28.5%('24.)정도임.(동종 지자체 평균은 '24년 36.1%)
-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주된 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확대로 자체재원 대비 이전재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동종 지자체도 동일한 상황임.
- 그럼에도 우리 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특별대책 수립 등 자체세입 확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경상경비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성과중심의 예산체계를 운영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아울러 확보된 재원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신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투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는 우선적·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세수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방안】 - 기업지원과

- 기업유치 기반 조성
 - (실무TF / 기업유치 전략회의 추진) ' 24. 3.부터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원으로 구성된 '실무TF 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 민간인 협력그룹과 함께 매월 '기업유치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 (입주전략 수립용역) ' 24. 7. 부천대장 제1·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전략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평가표 작성 및 관련 조례 개정, 기간별 기업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 구성) 수도권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12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공식 출범('23. 11.)하여 협력하고 있음.

* 부천·수원·고양·성남·안양·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 (인베스트코리아 업무협약) '24.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외국인기업 유치 추진을 추진하고 있음.

○ 기업유치 활동

- (전략적 유치활동) 기업체 방문 및 상담 30회, 산업전시회 참석 11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관련 단체 방문을 하였음.
- (체계적 홍보) 9월 10일부터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홈페이지 운영, MBC 라디오 광고, 네이버 등 온라인 배너 광고 등이 시작되었음.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우수 기업에 발송할 예정임.

【부천아트센터 운영비 지출에 대한 대책】 - 문화예술과

- 부천아트센터는 '23년 5월 개관 이후 전국 최고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부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 및 협연 공연 등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고품격 정통 클래식 공연예술과 대중성 높은 음악 연주회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개관 이후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기획공연은 물론,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서울대 공연예술 발전 MOU, 롯데문화재단 및 평창대관령 음악제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행사운영비 및 출연료를 절감해 나가고 있음. 또한, 관람 및 대관 사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기부금 사업 등 수입증대 방안과 관람객이 적은 특정 요일·시간대의 냉난방 시스템 조절, 시설관리 시스템 안정화 등으로 운영경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음.

□ 질 문 : 김 건 의원

○ 부천시 근로복지시설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료 징수방안 마련

- 근로복지시설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이 사무실을 두고 법적인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임.
- 공유재산법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재산관리자로서 사용료 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답 변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개관하여 현재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김포지역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천시흥김포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

복지관명	위치	시설규모(m ²)	분류	수탁기관	위탁기간
부천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원미구 계남로 336(중동)	3,408.24 (지하1,지상3)	시소유	한국노총부천 김포지역지부	2020.12. 1. ~2025.11.30.
부천시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원미구 석천로 38번길 5(상동)	536.72 (2층, 3층)	민간 소유	민주노총부천 시흥김포지부	2022. 8.27. ~2027. 8.26.

-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상 사용료 부과 근거 규정이 미비하였으며, 도내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사무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지자체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곳은 없었음.
- 현재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9개 근로복지시설을 양대 노총에 위탁 중이며, 유상사용은 2개소(부산, 인천)이고, 경기도는 무상사용 중임.
-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 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지침에는 노동단체의 사무실 입주 근거는 두고 있으면서도 별도 사용료 기준은 없음.

- 또한, 지난해 10월 노충 사무실 사용료 징수 관련 법률자문 결과,
 -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노동조합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 다른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공유재산법 등은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데, 「근로복지기본법」 및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이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탁의 경우 그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 사무실 운영 경비를 감면하여 주는 지원방법 또한 가능하다는 의견임.
- 그러나, 감사원의 ‘충청북도 감사결과 보고서’ (’23. 12.)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공유재산법을 배제하는 특별한 법령(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 2023년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등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을 노동조합 지역대표 기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바,
- 향후, 관련 조례 개정(사용료 부과)과 함께 위수탁 협약 재체결 시 협약서에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음.

□ 질 문 : 최초의 의원

○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 현 도당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고 공간이 협소하므로 인근 도당어울마당의 이용 실태조사 및 공간 조정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도당동 행정복지센터를 도당어울마당으로 이전 요청

□ 답 변

- 동 청사의 노후 등으로 인해 산발적인 청사 정비 요청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동 청사 정비를 위하여 ‘부천시 동청사 중장기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24. 8. 21. ~ 11. 18.)이며,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동 청사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 도당어울마당은 2016년 12월 준공 이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8개 시설이 입주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공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며, 도당동 주민자치 참여공간(253.28㎡)도 확보하여 운영중으로 현 단계에서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당어울마당 운영현황

【실태조사 실시 : 2024. 9. 3.(화)】

층수	시 설 명	전용면적(㎡)	담당부서	일평균 이용자 수 (연간 이용자 수)
1, 2층	주차장	-	-	-
3층	청소년문화센터	569.480	미래세대지원과	30명/일 (7,500명/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13.170	자치분권과	894명(4월~8월)
4층	청소년카페	261.730	미래세대지원과	70명/일 (25,000명/연)
	도당별육아나눔터	66.040	여성정책과	6명/일 (6,240명/연)
	도당도서관	414.190	수주도서관	125명/일 (22,880명/연)
5층	도당예술마당	151.570	문화예술과	17명/일 (4,077명/연)
	통계작업실	395.240	예산법무과	조사기간 18~140명/일 (267명/연)
	주민자치회	43.530	도당동	3명/일 (36명/연)
	주민자치프로그램실	209.750	도당동	311명/일 (3,732명/연)

□ 질 문 : 최은경 의원

○ 구)부천소사경찰서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관련

□ 답 변

【부천시는 경찰청과의 협의에 성실히 임한 것인가?】

- 기획재정부와 교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경찰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산하기관(치안센터)이 폐지되고, 불가피하게 교환 대상 물건이 일부 변경되어 최종 교환 대상 공유재산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우리시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방문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부천시가 경찰청(기획재정부)과의 협의에 끌려가며 구)소사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

- 송내동에 위치한 舊부천소사경찰서가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舊부천소사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한 것임.
- 우리시에서는 교환을 통한 국유재산 취득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찰청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신축·증축 등 재산권 행사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부천시가 173억이나 주고 구)소사경찰서 부지를 사야하는 이유】

- 국·공유재산 교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하는 가격 산정방법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교환 추진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재산가격을 결정하여 교환하도록 하고 있음.

행 정 국

□ 질 문 : 객내경, 양정숙 의원

○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 관련

[객내경 의원]

- 경제환경국 신설하면서 전략담당관을 별도로 신설 편제
- 국별 직제 및 기능 편제에 관하여

[양정숙 의원]

- 부천시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정원 증가와 조직이 커진 이유
- 4급 국장 신설 및 직제순서에 관하여

□ 답 변

【2025. 1. 1. 자 조직개편 추진방향】

-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4. 3. 29.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국(局) 설치 자율화 등의 권한이 확대됨.

<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 지자체(구를 설치한 시)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실·국 설치	4개 이상 6개 이하	제한 없음
사업소 설치	3개 이하(개편 시 경기도 협의)	제한 없음
한시기구 설치	4급 이상 경기도 협의	3급 이상 경기도 협의

- 지난 1. 1.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은 실·국 및 사업소(정책 기능 불가), 한시기구 설치 시 4급 기구 수 등의 제한으로, 일부 4급 기구 간 기능 제한 및 통솔범위 과다·과소의 불균형 등이 초래 된다는 내부 여론,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어서, 내년도 조직개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더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하게 되었음.

< 통솔범위(과 수) 과대·과소 현황 >

구분	기구 현황
범위 과대	기획경제실(9개 과), 도시주택환경국(8개 과)
범위 과소	도시균형개발추진단(3개 과), 도서관사업단(3개 과)

※ 제274회 임시회(2024년 3월) 시정질문에서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한 통솔범위 과다 기구 조정 등의 조직개편 필요성 강조

- 이에 따라, 현재 9개 과로 편제된 기획경제실에서 경제분야를 분리해 경제환경국(4급 기구)을 신설하고, 8개 과로 편제된 도시주택환경국을 도시국, 주택국으로 분리하는 등 실·국별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음.
- 신설하는 경제환경국은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정책 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등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와 환경을 통합 편제하였음.
또한, 우리 시 역점사업인 대장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저출생·고령화, 외국인 등 인구대응 정책의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해 시장 직속에 전략담당관 신설을 반영함.
- 국 직제는 국 간의 총괄·조정·협업 역할 강화를 위해 기획·행정 분야를 앞쪽으로 배치하고 경제·문화·복지 등 분야와 도시·주택·교통 등의 순서로 편제하였음.
그리고 최근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과 부서 간 협업 등 더 체계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국에 안전담당관을 편제해서 ‘행정안전국’의 명칭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임.
- 또한, 유사·중복기능의 과와 팀을 통폐합하여 관리인력(과장 1명, 팀장 2~3명)을 감축하고 실무인력(무보직 6~7급)을 보강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음.
아울러, 자연차 8~9급 직원의 사기 진작과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2025년 본예산은 현재 기구 기준으로 편성하여 시행과 동시에 예산이체로 처리할 예정임.

【인구감소에 따른 조직 및 정원 변경에 대하여】

- 우리 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23년부터 정원(2,656명)을 동결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정원 내에서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음.
- 다만, 행정조직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지방자치 확대에 인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확충에 따른 기준인력 순증과 정부 국가정책사업 및 지방 자치단체 고유 현안사업 등으로 공무원 정원과 기구에 대한 신규 행정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상황임.

□ 질 문 : 이학환 의원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납부 현황과 탈퇴 의사 여부 및 향후 계획
- 주요 사업 및 회의개최 실적

□ 답 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관련】

- 경기도 주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일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제안됨(2018. 11.).
- 우리 시는 참가 방침 결정 및 신청서 제출하였고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의결 후 규약 고시를 통해 가입 의사 표명(2019. 3.) 하였음. ※ 협의회 출범식 개최(2021. 5.)
- 인구수에 따른 분담금 기준 30만명 이상 시군에 해당되어 2022년 ~ 2024년까지 3년 간 매년 700만원 씩 총 2,100만원을 납부함.

< 분담금 기준 >

구분	분담금
광역	- 서울·경기 : 5천만원 / - 기타 시·도 : 3천만원
기초	- 인구수 구분 · 30만명 이상 : 7백만원 ·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 5백만원 / 10만명 미만 : 3백만원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의사 여부 및 향후 계획】

- 민선7기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구성했지만, 남북 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접적인 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로 가입 당시와 달라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회원 유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

【지방정부협의회 주요 사업 및 개최 실적】

- 우리 시는 2022년 전쟁반대 릴레이 캠페인(2022. 2. 24.)에 참여하였고, 올해 11. 1.(금) 국회에서 개최되는 남북평화협력 포럼 참석 예정임.
- 협의회 운영 및 평화통일 사업관련 등의 안건으로 개최된 회의는 2022년 제3차 정기총회와 2023년 제1차, 제2차 정기총회 및 12월에 개최된 임시총회, 2024년 제1차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참석하였음.

□ 질 문 : 최초의 의원

○ 역곡공공주택지구 행정구역 조정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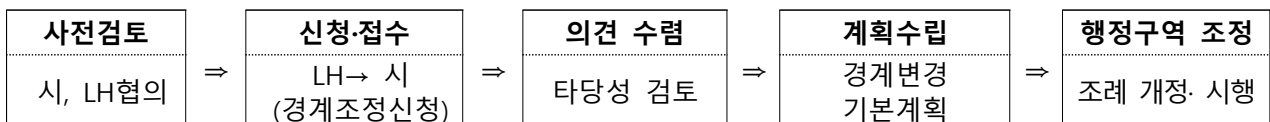
- 역곡공공주택지구 일부 필지가 춘의동과 역곡1동에 걸쳐 있음. 준공 즈음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시 다수의 이해관계로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행정구역 조정을 조기 추진하기 바람.

□ 답 변

【역곡공공주택지구 행정구역 조정】

-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걸쳐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LH)가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역곡공공주택지구는 춘의동과 역곡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부 지역(A2, B1 블록)은 춘의동과 역곡1동 행정동 경계에 걸쳐 있어, 향후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을 위해 행정동과 법정동 경계가 일치되도록 조정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사업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조하여 경계변경안 및 확정예정지번 사전협의를 통해 적기에 행정구역 조정을 신청·추진하겠으며, 준공(27.12.예정) 전 행정구역 조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행정구역 조정 추진(예정) 절차>



※ (참고) 지적 확정예정지번 절차

(근거법령 :공간정보관리법 및 지적확정측량 규정)

- (LH) 공사진행 ⇒ 예정지번 신청 ⇒ 확정측량 및 성과검사 완료 ⇒ 사업완료신고 ⇒ (區) 지적공부 정리

< 역곡1동-춘의동 기본 현황>

(24. 8월말 기준)

행정동(법정동)	세대수	인구수	면적(km ²)	비고(사업구역)
역곡1동(역곡동)	6,933	16,381	1.19	286필지 /18통
춘의동(춘의동)	6,751	13,808	2.92	311필지 / 1통

< 역곡공공주택지구 행정구역 현황>

□ 사업개요

- 기 간 : 2019.(지구지정일) ~ 2027.(12월 준공 예정)
- 위 치 / 면 적 : 춘의동, 역곡동 일원 / 66만 1,953㎡ (20만평)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85%) · 부천도시공사(15%)
- 공급세대 : 5,634세대 (수용인구 12,671명)



□ 역곡공공주택 입주 후 행정동 인구수 추이

(단위: 세대, 명)

구 분		세대수	인구수	비고
역곡1동	계	10,765	25,578	3,832세대 9,197명 입주
	2024년 8월	6,933	16,381	
	2027년 이후 입주세대	3,832	9,197	
춘의동	계	8,553	17,282	1,802세대 3,474명 입주
	2024년 8월	6,751	13,808	
	2027년 이후 입주세대	1,802	3,474	

□ 질 문 : 임은분 의원

○ 구청 민원처리 효율화 관련

-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처리하는 부동산계약 검인업무와 세무과의 취득세 업무처리 시 부서 간 공간이 멀어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됨.
- 종합민원실 내 두 업무를 모두 처리하면 좋겠지만, 공간 제약으로 어렵다면 검인업무와 세무부서의 위치만이라도 조정해 주길 바람.

□ 답 변

【구청 민원실 내 취득세 업무담당자 배치】

- 2024년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청의 부동산 검인업무와 취득세 업무가 구청 민원지적과 및 세무과로 이관되어 담당하고 있음.
-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부동산계약 검인신고는 3,558건이며 전체 취득세 신고 73,220건의 4.8%, 검인신고와 연계 취득세 신고는 390건으로 구청별 1일 1건 정도임.
- 취득세(부동산)는 지방세 중 가장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세목으로 다양한 세율, 감면 적용, 주택 중과 및 신고 시 적용해야 할 법령규정 등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실시간으로 창구민원 담당 검토 후 사후관리 담당의 추가적 검증과 부서 내부 협의 등 논의 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특성이 있어, 팀 단위 민원 대응이 필수임.
- 따라서, 구청 민원지적과(종합민원실)에 취득세 담당 직원의 일부를 배치 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담당자들 간의 협의 및 관련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세무부서 청사 재배치 등 민원 불편 해소】

- 원미구청과 오정구청의 경우 종합민원실과 세무부서 간 이동 동선이 짧은 편이나, 소사구청의 경우 1층과 5층으로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임.
- 소사구의 경우 협소한 청사 내(內)에 보건소와 소사노인복지관 등이 배치되어 있어 부서의 이전 배치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청사를 재배치 할 경우 민원편의와 부서간 동선을 최대한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또한 방문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 과정에서부터 업무처리 절차 및 청사 안내 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 부동산계약 검인 및 취득세 등 신고 현황 >

기간: 2024.1.1.~8.31. / 167일

(단위: 건)

소관부서	업무	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부동산계약 검인	3,558	1,167	1,168	1,223
세무과 취득세팀	검인 연계 취득세 신고	390	125	132	133
	검인 연계 취득세 신고 일평균 건수	2.1	0.7	0.7	0.7
	취득세 신고 (등록면허세 포함)	73,220	36,123	21,756	15,341

문 화 교 육 국

□ 질 문 : 김선화 의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천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노력 및 방안
- 부천시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나 행사의 참가 대상을 나이순으로 단순화 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의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의 입장

□ 답 변

【학업 중단 청소년 증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 코로나로 인한 장기 휴교로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진로와 관련한 고민의 해결 방안을 학교 밖에서 찾는 청소년의 증가로 학업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학업중단 주된 사유 >

(출처 부천시청소년실태조사 2023)

사유	학교 교육에 대한 회의	건강사유	특기 소질 중심개발
비율	22.7%	16%	9.3%

- 우리 시는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교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아 학업 중단 사유와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행 방안으로 교육지원(검정고시), 진로탐색, 멘토링지원, 직업체험, 문화체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원사업 현황 참고

< 학업중단 청소년의 주된 어려움 >

(출처 부천시청소년실태조사 2023)

구분	진로선택의 어려움	계획수립의 어려움	소속감 부족
비율	21.5%	15.4%	15.4%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청소년과 동등하게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

* 24년 신규지원 프로그램 : 재학생의 경우 생존수영이 의무수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

○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참고)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비고
합계	9개사업	11억9천715만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학업(검정고시, 입시컨설팅),건강검진 등 -인식개선 홍보활동	3억4천453만원	미래세대 지원과
학교밖청소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복지지원(의료, 생활, 교육비 등) -멘토링지원(학습멘토, 진로멘토 등) -자립지원(자립준비, 직업훈련 등)	2억109만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급식 지원 -인근식당 연계 및 급식 쿠폰 지급(1식1만원)	5천509만원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문화공연 및 전시 관람 지원 -예·체능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5천199만원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급	-자립성공 청소년 수당 지급 -대상: 자립훈련 이수 및 자격증 취득 청소년 -지원단가: 15-25만원 -지급방법: 문화상품권 등	1천300만원	
학교밖청소년 배움터 지원 (공모사업)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교육기관	3천588만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따라 신고한 기관 -지원일수: 188일 이내	4억6천222만원	도시농업과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대상: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청소년 -지원한도: 1인당 40만원	1천520만원	평생교육과
학교 밖 어린이 생존수영 교실	-대안교육기관 청소년(9-11세) -생존수영관련 이론 및 실습	1천815만원	체육진흥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금지 완화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및 의견을 반영하여, 부천시 박물관, 식물원 등 할인 대상을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
- ※ 청소년 무료입장 및 할인대상 개선 협조 아동청소년과-33731(2022. 12. 20.)
- 앞으로,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 받지 않도록 각종 대회나 행사 개최 시 참가 대상을 청소년으로 일원화 하겠으며, 이를 적극 홍보하겠음.

□ 질 문 : 정창곤 의원

○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 부천아트센터의 티몬, 위메프 사태 현황 및 대응방법

□ 답 변

【부천아트센터 통합운영시스템 운영현황】

- 부천아트센터는 홈페이지, 모바일 웹, 티켓 시스템이 결합 된 자체 통합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존 유명 티켓 예매처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과 홍보 채널 확보를 위해 「실시간 연동 예매」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연동예매처로는 티켓링크, 예스24, 위메프, 11번가 4곳이 있었으나 현재는 티켓링크, 예스24만 운영되고 있으며, 티켓 예매 비중으로는 아트센터 약 90%, 티켓링크 약 6%, 예스24 약 3%, 위메프 약 1% 이내로 운영되고 있음.

※ (11번가) 2023.12.31. 티켓서비스 종료 / (위메프) 티메프 사태 직후 중단

【티메프 사태 대응】

- 부천아트센터는 티메프 사태 익일 위메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공연 상품의 판매 중지 처리를 하였으며, 대관업체에서 위메프를 통해 판매한 티켓을 구매한 고객 총 3명(좌석 5개, 65,000원)과 직접 통화하여 공연 관람에 지장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천아트센터 미정산 금액은 없었음.

【언론보도 대응】

- 연합뉴스, 싱글리스트에 ‘인터파크를 통해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언론사에 사실확인 및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임. 향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 대응해 나가겠음.

□ 질 문 : 장성철 의원

○ 부천시 레지던스룸 화재 안전 대책 마련 및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건

- 부천문화레지던스 화재 안전 대책 마련
- 청년예술인 내 에어컨 설치 및 폭염피해 현황 조사
- 청년예술인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설치 요청

□ 답 변

【부천시 레지던스룸 화재 안전 대책 마련】

- 부천문화레지던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인재 유치·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부천클러스터(웹툰융합센터, 비즈니스센터, 만화창작스튜디오) 입주자, 각종 아카데미 교육 참여자,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작가, 市 문화산업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이용대상자로 2025년 정식 운영 예정임.
- 해당 시설은 청년예술인주택 101동 2,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객실 총 19개실 및 공용주방, 관리사무실(린넨실), 2, 3층 장애인 화장실 등의 연계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물 현황 >

건축물현황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층수	지하3층, 지상25층(레지던스 시설: 2,3층 1,269.39㎡)
	사용승인일	2023. 11. 27.
화재보험 가입현황	보험사	MG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기간	2024. 1. 8. 16:00~2025. 1. 8. 16:00(12개월)
시설관리자 선임현황	선임일자	2023. 12. 31.
	자격등급	1급 소방안전관리강습자

- 레지던스는 청년예술인주택 내 지역편의시설로써,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가입 및 시설관리, 소방안전관리 등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화기 설치기준에 따라 객실별 1대, 공용주방 및 각 층 복도 등 총 25개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음.

- 또한, 전 공간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 설치 및 공용공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객실 내 롤스크린은 모두 방염처리 된 제품을 설치하였고, 객실 내부 및 공용공간 등에 금연 표시를 부착함.



- 부천시는 매달 1일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 등 점검표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 대상자 입실 전 화재 시 행동·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요구】

- 청년예술인주택은 부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하여 건립한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임. ‘23. 12.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약 630세대(입주율 74.1%)가 계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초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되어 공용공간 운영 등 활발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청년예술인주택은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부대복리시설과 냉장고, 쿡탑, 책상 등이 빌트인 제공되었고, 당시 에어컨 설치 의무설치 대상시설*이 아니었음.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8제1항제1호 25㎡ 이하 세대에 에어컨 의무 설치(2021. 3. 31. 개정)
 ▶ 청년예술인주택 건설 사업승인 (2017. 12. 28.), 소급적용 불가

- 부천시는 ‘24. 2월 관리주체인 LH에 입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작업 및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 조기 운영을 요청하였고 현재 일부 공용공간(공용창작실)을 운영중임.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개방을 추진할 예정임.
- 현재 에어컨은 입주모집 공고문에 따라 입주민이 직접 설치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기타 주거여건(에어컨 설치 현황 포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LH와 협의하여 적극 마련하겠음.

□ 질 문 : 장성철 의원

○ 부천아트센터 관련 지방채 상환계획 및 시민을 위한 활용 방안

- 부천아트센터 운영비 절감 대책
- 부천시민들을 위한 부천아트센터 정책 방향

□ 답 변

【부천아트센터 지방채 상환계획】

- 부천아트센터 지방채 발행금액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66억원 (5년 거치 10년 상환 / 고정금리 1.36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53억 (3년 거치 5년 상환 / 고정금리 1.5%)이며, 연도별·차입선별 상환 조건에 따라 2025년 60억원, 2026년 117.2억원, 2027년 117.2억원, 2027년 이후 324.6억원을 상환 예정임.
- 세원 발생 시 지방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 하고, 연도별·차입선별 상환조건 및 상환 계획에 따른 순차적 원리금 상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부천아트센터 운영비 절감 대책】

- 관람객이 적은 특정 요일·시간대의 냉난방 시스템을 조절하여 공공요금 (냉난방비)을 절감하고, 경비·미화 용역 등 시설관리 위탁 업무가 안정화 되어감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위탁경비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또한, 서울대 공연예술 발전 MOU, 롯데문화재단 및 평창대관령음악제 업무협약 등 타 기관과의 MOU 체결·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출연료 등 행사운영비를 절감해 나가고, 아트센터를 대표하는 고품격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협연 공연과 기획 공연, 대관, 아카데미 수강료 등 자체 재원 비중을 높여 나가겠음.

【부천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

- 부천아트센터는 우리나라 최고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문화분야 인프라이지만,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 인프라로 부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전국 최고의 음향시설로 평가받는 아트센터는 마니아층을 위한 고품격 클래식 공연장 기능과 대중성 높은 연주회 개최로 다양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장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음.
-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임클래식 등 해외 유명 연주자 공연가격을 10~25% 할인하고, 티켓가격을 15%(1인2매)를 상시 할인하는 제도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노력도 하고 있음.
- 한편,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 파크콘서트 등 무료음악회와, 어린이·청소년·가족 등 세대별 맞춤 기획 공연 등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음.

□ 질 문 : 장성철 의원

- 부천종합운동장 지역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 도입 확대 요구
 - 부천종합운동장 놀이시설(경인랜드) 철거 부지 인근 어린이 놀이터 조성 제안

□ 답 변

【종합운동장 경인랜드 철거 현황】

- 2001년 부천시 최초 놀이동산이었던 경인랜드는 약 2,860㎡ 면적에 바이킹 등 15종의 놀이시설물을 설치하여 2015년까지 운영되다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계획’으로 놀이시설 사용허가를 종료함.
- 운영 종료 후 9년여간 소송으로 놀이시설물이 방치되면서 흉물스럽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나, 2024년 5월 법원 강제매각 절차를 통해 철거되었음.
- 올해 하반기 중에는 잔존물(놀이시설물 기초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경인랜드 부지를 원상복구할 예정임.

【종합운동장 내 파크골프장 사용 현황】

- 종합운동장 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중인 잔디광장은 2018년 폐쇄된 북부수자원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의 대체공간*으로 평일엔 장애인파크골프, 일반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등 어르신들의 체육여가공간으로 활용중이며 주말에는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음.

* 야구장 조성에 따른 파크골프장 폐쇄

【종합운동장 내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 부천종합운동장 일원은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계획’이 예정된 구역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나 고정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개발사업 추진 전 까지 임시적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현재 이 공간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여가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부천FC 홈경기, 진달래축제 등 각종 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지는 축제문화 공간,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운동형 체험공간 등으로 다양한 시민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질 문 : 김미자 의원

○ 중동 IC 하부공간 관리 관련

- 중동 IC 하부공간 관리방안 또는 시설 계획

□ 답 변

【해그늘체육공원 현황】

- 해그늘체육공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 장기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중이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위치	교각번호	(현) 시설 현황	(향후) 시설 계획
1구간	P50-P51	풋살장 1면	풋살장 1면 추가
2구간	P54-P58	게이트볼장 8면	-
3구간	P59-P63	론볼장 1면	테니스장 6면, 정구장 2면 (7구간에서 이전)
4구간	P64-P71	족구장 12면	족구장 1면 추가
5구간	P72-P75	X-게임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배드민턴장 4면 추가
5-6구간	P77-P84	시설 조성 불가(중동 IC 램프 구간)	
6구간	P84-P88	족구장 7면, 농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족구장 1면 추가
7구간	P89-P93	정구장 2면, 테니스장 6면, 족구장 2면	3,4구간으로 이전

【중동 IC 하부공간 현황 및 관리방안】

- 중동 IC 하부공간은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체육시설 조성이 어려운 구간으로, 남측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음벽 설치공사의 자재 보관 장소로 임시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방음벽 공사자재는 정리될 예정임
- 현재 파손된 철제펜스 정비 및 도로변 제초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 등 환경정비를 통해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부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동 IC하부공간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부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질 문 : 양정숙 의원

○ 부천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 요청

-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 요청

□ 답 변

- 우리 시는 북사골예술제, 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세계비보이대회, 부천시 시립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 행사별 여건에 따라 시민 또는 전문가 모니터링단 운영, 외부 기관(전문가)의 컨설팅 및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Feed Back)를 통해, 다음 행사 추진 시 만족도가 높은 요소는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있음.

시민의견 수렴 추진내용

- **부천시 시립예술단**: 매년 말 관람객 300명 이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 (설문내용) 공연정보 수집, 입장료 수준, 공연만족도, 연주 희망일, 공연장르 등
↳ (시민의견 반영) 아침의 콘서트, 가족합창뮤지컬, 우리동네음악회 등 개최
- **부천 3대 국제축제(BIFAN, BICOF, BIAF)**: 부천문화재단 컨설팅 실시
 - (내용) 시민모니터링단, 관광분야 전문가 컨설턴트, 축제연구단 운영, 행사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민대상 설문(만족도)조사 실시
 - (설문인원) 2023년 636명, 2022년 523명, 2021년 971명
- **부천세계비보이대회**: 축제전문가 현장평가(성과평가), 설문조사 실시
 - (설문내용) 프로그램, 축제운영, 홍보·안내,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 (설문인원) 2023년 312명, 2022년 75명, 2021년 축제전문가 평가(온라인 개최)
- **북사골예술제**: 축제전문가 현장평가(성과평가), 설문조사 실시
 - (설문내용) 프로그램 및 운영 만족도, 인지도 등 조사
 - (설문조사) 2023년 221명, 2022년 199명, 2021년 102명
- **부천FC**: 관람객 대상 QR코드 활용 만족도조사 실시
↳ (시민의견 반영) 경기장 동선 안내판 제작, 조명 확대 설치, 구단 신상품 출시 등

-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문화예술행사의 통합 만족도 조사는 조사범위, 조사방법,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질 문 : 최의열 의원

○ 부천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경영합리화 모색

- 부천문화재단 조직 및 경영합리화 방안
- 위탁사업 정규직 채용 및 위탁기관 종료 후 인력관리 방안
- 시승격 5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와 지역예술인을 위한 정책 관련

□ 답 변

【부천문화재단 조직 및 경영합리화 방안】

- 부천문화재단은 지역성장 동력창출 및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해 2001년 10월 1일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시민 문화 예술 교육 및 활동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지역 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임.
- 문화가 시민을 위한 정신적 건강과 정서적 치유를 위한 정책임을 감안, 시의 여러 문화자원을 시민들이 개인 취향에 따라 언제든지 선택·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문화예술진흥 정책개발 및 자문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부천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업무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한 조직진단 및 사무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음.
- 현재, 정원 107명, 현원 103명으로 결원이 4명인 상황이나, 신규 인력 채용은 최소화하고, 업무조정 등을 통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위탁사업 정규직 채용 및 위탁기관 종료 후 인력관리 방안】

- 부천문화재단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01년 설립하였으며 문화 관련 분야의 특화된 기술(경험)과 노하우 등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임.
- 이에, 우리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부천시박물관 및 부천아트벙커를 2021. 1. 1.부터 2025. 12. 31.까지 관리위탁 중임.

- 2018년 6월이후 고용노동부의 2단계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위탁 인력채용에 대해 공인노무사 및 고용노동부(공공부분정규직화추진단) 자문 결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와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로 판단 될 경우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라는 의견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음.
- 현재, 신규 인력 채용은 최소화하고 있으나, 관리위탁이 종료될 경우, 사무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임.

【시 승격 5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와 지역예술인을 위한 정책 관련】

- 부천문화재단은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문화적으로 말(표현) 할 수 있는 시민이야기 페스티벌 사업*을 추진, 2,923명이 참여하였으며, 해당 조형물은 시민이야기 트리로 페스티벌의 한 분야였음.
- * (시민이야기 페스티벌) 도시 이야기 걷기대회, 문화도시 시민총회 및 회의, 500명 시민이야기를 담은 트리 제작 및 전시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 참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안전 관리, 홍보 등 총괄하였음.
- 아울러, 부천문화재단은 전문예술인 지원을 위한 부천예술찾기<미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청년예술가S>, 문화예술 창작·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예술가가 참여하는 아트페어, 아트마켓 등 예술 유통사업, 지역예술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전시, 공연기획 제공, 홍보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부천예총, 부천문화원, 부천민예총 등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업과 생활문화 네트워크 축제, 문화교육사업 등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음.

□ 질 문 : 최의열 의원

○ 부천시박물관 위탁관리 전면 재검토

□ 답 변

【부천시박물관 현황】

- 우리 시는 역사적, 자연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표방하며 2003년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에 교육·유럽자기·수석·활박물관을 개관하였으며 2006년에 펄벅기념관을 개관하여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과 문학성을 선양하고 있음. 현재의 시립박물관 자리에 용기박물관(2011년)과 통합관(교육·유럽자기·수석박물관)이 2021년에 개관하였고 2022년에 수주문학관을 개관함으로 지금의 박물관 모습을 갖추게 됨.
- 박물관별 특성화된 콘텐츠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방문율을 높이하고자 ‘시립-부천역사, 활-활문화, 수주-문학, 펄벅-박애정신, 문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부천시박물관(부천시립박물관, 활박물관, 펄벅기념관)을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부천문화재단(2001년 설립)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작년 동기간 대비 박물관 관람객 비교분석】

- 박물관 관람객이 2020년부터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이 2023년까지 지속된 점과, 교육·유럽자기·수석박물관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현재의 부천시립박물관으로 이전에 따른 지리적 환경의 변화가 감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2023년 8월 14일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박물관 관람료 무료 후 작년 대비 관람객 52.5% 증가하였음.

※ 2024년 1월~6월 관람객: 45,939명(작년 동기 30,121명 대비 52.5% 증가)

총 계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박물관	펄벅기념관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45,939	9,814	22,448	6,369	7,308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 1박물관 1특별전을 개최(활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수주 번영로 사진 특별전, 시승격 50주년 특별전) 하여 상설전시실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올해 5월 시민 대상 ‘필벽인문학아카데미’를 처음 개최(4회 8강의)하여 필벽인문학 저변 확대를 시도하였음.
- 우리 시의 재정상황 악화로 유물구입의 어려움과 박물관 콘텐츠 부족으로 관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
- 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천근·현대산업역사관」 조성 및 ‘근·현대 4대 기업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콘텐츠 강화를 위한 1박물관 1특별전 개최 및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아울러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관점의 박물관 포럼’ 개최와 체험·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관람객 유인을 위해 휴게 편의시설을 통해 관람객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아울러, 박물관 운영은 민간위탁(공개모집) 및 관리위탁(수익계약), 직영하는 3가지 방식이 가능함.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 질 문 : 최의열 의원

- 효과 없는 문화사업(부천세계비보이대회, 부천국제문학상 등)의 일몰을 통해 기존 사업의 질적 성장 도모 관련
 -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한 문화사업 일몰

□ 답 변

- 우리 시는 지난 30여년간 만화·영화·음악·애니메이션·비보이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공업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도시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어 시민의 자긍심을 높였음.
-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 부담과 투입 효과를 가시적으로 거두기 힘든 ‘문화 영역’의 속성으로 문제의식도 나타나고 있어 기존 문화행사의 양적 증가보다 질적 성장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 역사가 짧고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 듯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러 콘텐츠가 융합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부천세계비보이대회 개최 관련】

- 부천세계비보이대회는 우리 시만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축제 개최의 필요에 따라 2016년부터 8년간 대회를 개최하여 평균 6,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한 전국 유일 세계대회로, 젊고 역동적인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임.
- 국내 및 세계 우수 비보이 댄서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수준 높은 공연으로 문화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며, 해외 참가자와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음.
- 다만, 참여자 위주의 대회 운영으로 그들만의 축제로 인식되고, 일반 시민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한 면이 있었음.
- 이에, 올해는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축제적 요소를 극대화하여 경연과 공연, 그리고 스트릿댄스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부천 대표 거리문화 축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2024 부천 비보잉 & K-댄스 페스티벌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브레이킹이 2024년 파리 올림픽, 2025년 전국체전 시범종목 채택 등 스포츠로써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아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화 축제로 변화되고 있음.
- 우리 시는 8회를 개최하면서 대회의 세계적인 위상과 규모, 그리고 운영과 내용 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과평가로 미비점은 보완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천 대표 거리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부천국제문학상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 2017년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부천은 이주민의 도시라는 부천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을 제정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21년 제1회 문학상을 시작으로 올해 제4회를 맞이함.
- 2020년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문학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작 공모부터 예비심사(추천위원회)와 본심사 및 최종심사(심사위원회), 의결(운영위원회)의 공정한 과정을 거쳐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음.
- 문학상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2회 수상작 ‘파친코’와 제3회 수상작인 ‘동조자’는 TV시리즈로 제작되어 인기리에 방영되었고 제28회 BIFAN에서는 ‘동조자’가 특별 상영되며 문학상의 위상이 강화됨.
 - ※ 서울신문(2017.11.8.) : 부천은 ‘한국판 에든버러’
 - ※ 시사저널(2020.8.21.) : ‘이방인의 도시’ 약점 스스로 이겨낸 부천
 - ※ 파친코 : 애플TV에서 제작·방영 / 동조자 : HBO(박찬욱 감독 연출)에서 제작·방영
- 문학도시로서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문학상이 폐지될 경우 2017년부터 이어져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부천 문화산업의 큰 손실임.
- 다만, 문학상이 노벨문학상, 맨부커상, 공쿠르상과 같은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디아스포라’ 정신을 지키면서도 내실있는 문학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복 지 위 생 국

□ 질 문 : 윤병권 의원

○ 부천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관련

-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편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

□ 답 변

- 우리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총 3,171개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

-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이동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통한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소규모* 시설도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대상 폭이 확대되고 있음.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 면적기준 강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22. 5월 개정 /바닥면적 300㎡(500㎡)→ 50㎡로 확대

- 향후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미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만전을 기하겠음.

【참고】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단위: 건)

구분	계	공공 시설, 공원	1·2층 근린 시설	복지 시설	공동 주택	의료 시설	종교 시설	문화 집회 시설	공장, 업무 시설	숙박 시설	기타 (운동,판매 장려시설)
2023년 전수조사	3,171	100	460	221	1,876	39	59	7	332	18	59

□ 질 문 : 윤병권 의원

○ 노후화된 노인정 환경개선 관련

- 노후화된 노인정이 많음. 특히 화장실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
- 공공주택 노인정을 포함하여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 노인정들을 파악하여 환경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 바람. 더불어 소모품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답 변

- 우리 시에는 현재 공동주택 내 사립경로당을 포함하여 367개의 경로당이 운영중이며, 연간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경로당 시설물 보수 및 안전환경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 어르신 편의 제공에 힘쓰고 있음.

- 경로당 현황 -

계	시립			사립			
	계	시 소유	임 대	계	개인,단체	사립(의무)	사립(비의무)
367	145	133	12	222	6	182	34

- 연초 「경로당 시설물 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전수조사를 통해 시립 및 사립(비의무)경로당 154개소에 대해 도배, 장판, 방수, 화장실 개보수 등 실내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사립경로당을 포함한 108개의 경로당에는 가스타이며, 실내(화장실 포함) 안전바, 방충망 등 안전환경 지원을 실시하였음.
- 특히 지난 2월~4월에는 시립경로당 7개소의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음.
- 사립경로당의 경우 실내외 구조 리모델링 공사는 실시하지 않으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임.
- 향후 2025년 경로당 시설물 전수조사 시에는 화장실 환경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추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 보수를 실시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 아울러, 경로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부식비, 소모품 등은 매월 운영비(39만원~47만원)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질 문 : 객내경 의원

○ 경기도 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 공간 관련

- 경기도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에 관해 원종동 舊마사회 건물 활용방안
- 원종동 舊마사회 건물 이전불가시 대안

□ 답 변

- (사)경기도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는 상동 주거지역의 단독주택 건물로, 동일 규모의 사무실 이전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 중임.

【원종동 舊마사회 건물 관련】 - 문화교육국

- 우리 시 소유 5층을 2025년까지 청년 공간으로 조성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4층→2층)으로 리모델링 할 예정임
- 따라서 현 건물의 용도로는 농아인 협회 및 경기도 복지회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임.

【공유재산 관련】 - 기획경제실

-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나 협회의 필요공간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 시유재산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 및 취득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경기도 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 관련 재산의 관리 및 취득 관련은 현재 공유재산 중 이전이 가능한 유희공간이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유희공간 발생 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 질 문 : 양정숙 의원

○ 우리 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관련

- 우리 시의 외국인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약 7%이며, 전국 평균 4.89% 상회 수치로 연초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기존사업 강화, 외국인행정수요 대응·소통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 지시함.
- 현재, 우리 시의 외국인정책과 향후 추진 정책에 대한 「부천시 외국인주민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 바람.

□ 답 변

- 부천시 외국인주민 수는 55,383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6.8%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위에 해당하며, 최근 10년간 외국인주민 수는 29,235명 증가하였음.

총계	다문화가족				기 타 (근로자, 동포 등)
	소계	결혼이민자 (국적 미취득)	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 출생자녀	
55,383명	18,283명	4,254명	9,116명	4,913명	37,100명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2. 11.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우리 시는 「함께하고 존중받는 다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회적응 및 생활 안정 지원’ 37개 사업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0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 외국인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4. 7월에 외국인주민을 ‘정책 전문요원’으로 채용, 8월부터 주 3회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소통관」을 운영하고 지난 5월부터 민·관 협력「외국인주민 시책발굴 TF」를 구성하여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정책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25년 조직개편안에 외국인주민 전담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며, 「외국인주민 전문 인력풀」구성 등을 통해 촘촘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할 예정임.
- 특히 우리 시의 외국인정책은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정착주기별 및 가구상황별’ 세심한 지원으로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임.

도 시 주 택 환 경 국

□ 질 문 : 윤병권 의원

○ 소방안전관리자 처우 개선 및 다세대주택 안전관리 관련

- 공동주택,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책임에 비해 수당이 현저히 낮음.
- 세대가 적은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같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소방서와 협력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함.
-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빌라, 아파트의 경우 소방안전 관리 및 점검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답 변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자로서 그 처우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및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로 시에서 직접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우리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15층 이하)·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구조를 중점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C등급 이하의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총 72개소)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해당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C등급의 경우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D·E등급의 경우 연 3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더불어 2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

등급	C(보통)	D(미흡)	E(불량)
개소수	20개	51개	1개
용도	연립주택		

□ 질 문 : 윤병권 의원

○ 부천시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화 관련

-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어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 화재는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부천시 관공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요청 및 지상 이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 일반 공동주택과 대형 건물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파악과 함께 화재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 답 변

【부천시 관공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지상 이전 계획】

○ 부천시 관공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구분	계	지상	지하	비고
부천시 관공서	109개소	81개소 (74%)	28개소 (26%)	

○ 지하 설치 28개소 중 지상 이전 계획인 있는 곳은 아래 2개소로 파악됨.

- 부천시청 부설주차장(재산관리과), 소사동 행정복지센터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위치 및 지상 이전 설치 계획 현황 조사(기후에너지과-31053, 2024. 8. 3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부천시 관련 조례에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및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임.

○ 시설물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지상에 공원화가 되어 있으며, 그 외 행정복지센터 등은 주차 공간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상 이전에 어려움이 있음.

【부천시청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화 관련】 - 재산관리과

- 시청 지하 충전시설은 총 12기(고속 2기, 완속 10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민간충전사업자와 연계한 환경부 공모사업(무상)으로 지상주차장에 고속충전기 6기(듀얼 3기, 일반 3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하에 설치된 기존 완속 충전시설 10기는 철거 예정임.

-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나머지 고속충전기 2기는 잔여 계약기간 (2022.1.1.~2026.12.31.)이 남아 철거가 곤란하여 이전 설치비(232백만원)를 2025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임.

<지하주차장 충전기 현황>

주차장명	설치충전기수	지상 이전 설치 계획 및 시기		비고
		계획여부	시기	
부천시청 부설주차장	15기	○	- 2024. 12.: 10기 철거 - 25년 본예산: 2기 이전	지하: 12기 지상: 3기

【부천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 관련】 - 주차정책과

- 부천시 소유 전기차충전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친환경에너지팀)에서는 공영주차장 총 36개소 104대 129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공영주차장의 경우 대부분이 지상에 공원화가 되어 있어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판단)됨.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해 부천시 감독부서인 주차정책과에서 전기차충전시설이 설치된 각 공영주차장별 질식소화포 및 열화상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 아울러, 부천도시공사에서는 지하주차장에 기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구역에 집중적으로 방사가 가능한 스프링클러 구조 조정(헤드 간격 2.5m ⇨ 1.8m 정도)이 가능한지, 또한 화재 시 대응에 효과가 있는지 부천소방서에 자문을 구하여 추진할 계획임.

【부천시 내 공동주택과 대형 건물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 공동주택(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구 분	계	지상	지하	확인 불가 (설치위치 미표기)
공동주택 (아파트)	289	59 (20%)	195 (67%)	35 (12%)

※ 자료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2024. 8. 30. 기준)

※ 아파트 충전기 의무설치기한 : ~2025. 1. 28.까지 (2026. 1. 28.까지 설치 유예 가능)

○ 공중이용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구 분	계	지상	지하	확인 불가 (설치위치 미표기)
공중이용시설	266	50 (19%)	119 (45%)	97 (36%)

※ 자료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2024. 8. 30. 기준)

【화재 예방 및 대책】

-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함.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2024. 9. 6.)》

- ▶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
- ▶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등으로 기업 책임 강화
- ▶ BMS*·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화재 예방·대응능력 제고
- ▶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 1년간 유예
- ▶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추가 검토 예정 (지하 3층 설치 허용 규정 유지)
- ▶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 Battery Management System :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

-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우리 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음.

□ 질 문 : 장성철 의원

○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및 지원 대상 확대 요구

-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예산(6.79억원)은 전년도(11.9억원) 대비 43%나 삭감된 것인데 삭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 요구함.
- 최근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졌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문제 발생 우려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이외에도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 모색, 노후아파트 수도배관 교체 지원, 구형 CCTV, 낡은 보도블럭, 어린이놀이터 환경 개선, 아파트 가로등 교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민체감 가능한 적극행정 요구

□ 답 변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 향후 확대 편성 관련】

-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의 경우, 도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삭감(56.5%) 통보되어 매칭사업비가 삭감되었음.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음.
- 시 재정여건 개선 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최근 2년 예산요구 및 편성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요구액	편성액
2023년	시비	8	6
	도비	12.2	5.8
2024년	시비	6	3
	도비	8.72	3.79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련】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은 관리주체와 주택의 소유자가 결정할 사항이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지원단’을 통한 장기수선계획분야 자문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겠음.

【지원대상 확대 관련】

-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은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항목 외에도 다수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제30호에 따라 ‘그 밖에 주민공용 시설’로 규정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두었음.

<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상 지원항목 >

- | | |
|---|---|
| 1.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및 유지 보수 | 15.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주민에게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부분의 보수 |
| 2.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 | 16.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
| 3. 공동주택의 경비실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 17.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공개를 위한 중계 시설의 설치 지원 |
| 4. 공동주택단지의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8. 주차관제시설 설치·보수, 차단기의 설치·보수 및 차량 진출입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로, 보도, 가로수, 문주의 설치 |
| 5.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 19. 공용부분의 노후가스배관 교체·보수 |
| 6.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 20. 조경관리 지원 사업 |
| 7.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21. 외벽균열 보수(30년 이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
| 8. 담장허물기 사업(단,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 | 22.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
| 9. 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보수 | 23.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 등을 포함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
| 10.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보수 | 24. 공용부 노후 소화설비 교체공사 및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에 따른 화재안전 설비공사(세대 미포함) |
| 11. 석축·옹벽 등 수해·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 | 25. 그 밖의 주민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 |
| 12.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분류 보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보수 | |
| 13. 옥외 운동시설 공간(운동기구 설치하는 제외), 작은 도서관, 공동화장실의 보수 | |
| 14.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사업 | |

□ 질 문 : 김 건 의원

○ 관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요구함.

□ 답 변

【관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관련】

○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여부 현황조사 결과

조사대상	계	설치	미설치	스프링클러 종류		
				습식	건식	혼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89	168	21	17	149	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89개 단지 중 168개소 설치 완료
- 21개소 미설치 사유: 지하주차장 無

【향후 조치 계획 관련】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45개 단지)의 경우 연락처 및 팩스 부존재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편 및 현장조사 등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실태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관계 법령 안내, 보조금 지원사업 등 안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음.

□ 질 문 : 김 건 의원

○ 상동 540-1 공공기여 진행 관련

- 상동 540-1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여에 대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기 부적절 및 절차상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요구

□ 답 변

- 상동 540-1번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를 통해 건축밀도(용적률 등) 완화를 계획하고 있음.

- 2023. 7.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기여*를 제안받았으며,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공공기여에 대한 적정성 및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2024. 6.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공공기여 주요내용) 약 345억원 규모의 조성 공사를 통해 용적률 49% 완화

- 행정안전부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건물 신축 등 건축허가가 요구되는 기부채납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이후 건축허가 및 착공 등 절차를 이행토록 명문화 되었으며, 본 사업은 2024. 1.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이는 공공기여에 대한 대상 및 완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 부천시는 공공기여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참고1 상동 540-1 주택건설사업계획 (2024. 1. 공공기여 내용 미반영)

○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 사업기간 : 2024. ~ 2030.

○ 사업시행자 : 대신자산신탁(주)

○ 건축개요

(건축용도) 공동주택(936세대), 업무시설(917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건축규모) 건축면적 20,560m² / 연면적 465,992m² (지상 47층, 지하 7층)

(건축밀도) 건폐율 57.96%(80% 이하) / 용적률 792.99%(800% 이하)

※ 공공기여 내용 및 그에 따른 완화 사항 제외

참고2 공공기여(안)

○ 기여범위 : 토지면적 1,662m²(순부담 기준) 이상의 부지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으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

* 약 345억원 상당 / 2023년 공시지가의 2.7배(770만원/m²) 기준

○ 기여내용

- 위 치 : 원미구 상동 549번지(상동호수공원) 내 주차장 1부지

- 시설종류 : 다목적 복합문화시설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

- 시설규모 : 건축면적 3,928m² / 연면적 7,952m² (지상2층, 지하1층)



※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질 문 : 김 건 의원

○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대응 관련

- 전기차 화재 시 소화기의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집행부는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백지화하였으나, 가장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 적절한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
- (대중교통과 관련)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 시정질문을 통해 전기버스의 지하주차장 조성은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시에서는 관련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금번 추경 예산에도 수립하지 않았음.
- 전기차 지하 주차장 화재와 관련하여 시민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함.

□ 답 변

【부천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 대응 대책】

- 전기차 화재 진압이 가능하고 적응성이 있는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가 없어 올해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소화기) 설치 지원사업비를 부득이 전액 삭감하였음.

《소방청 보도자료(2024. 8. 12.)》

전기차 화재는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수량 및 표시 기준만 존재하고 안전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 정의가 소화기로 한정되어 있어 소화기 외 다른 소화설비를 민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함.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2024. 9. 6.)》

- ▶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
- ▶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등으로 기업 책임 강화
- ▶ BMS*: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화재 예방·대응능력 제고
- ▶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 1년간 유예
- ▶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추가 검토 예정 (지하 3층 설치 허용 규정 유지)
- ▶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 Battery Management System :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

-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우리 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음.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화사업 안정성 검증 관련】 - 대중교통과

- 대장신도시 내 대장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은 시 주관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해야 하나, 재정 여건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그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 2025년 본예산에 부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를 위한 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며, 용역 진행 시 안전성을 중심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개선 및 조성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대장공영차고지 지하화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 결정된 대장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사업시행자(LH)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도시균형개발추진단

□ 질 문 : 장성철 의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주민 과열 현상 관리
- 입주민동의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요구

□ 답 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주민 과열 현상 관리】

- 그간 우리 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을 위하여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 국토연구원, LH와 함께 꾸준히 협의하고 논의해 왔음.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지난 6월 25일에 ‘중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해당 발표 이후에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임.
- 우리 시는 지난 7월 12일에 선도지구 선정 공모 지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공모 준비 중인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세한 공모 내용에 대해 주민과 함께 공유하였음. 특히, 선도지구에서 미선정된 단지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향후 선도지구와 차별 없이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 앞으로도 선도지구 공모 추진 준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공모 내용을 컨설팅하는 등 공모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주민들의 오해와 불편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 향후 선도지구 추진 일정은 9월 23~27일 공모 신청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 후 11월에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임.

【입주민동의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요구】

- 선도지구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원님이 깊은 관심과 우려 사항을 제기하여 주신 것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도 공모 준비과정에 대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선도지구를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우리 시는 마을별 추진준비위원회 등이 선도지구 공모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도지구 선정평가 대상구역(16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음.
- 특히,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음을 안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벌칙 사항을 명기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음.

< 중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주의사항 안내 공문 시행 내용 >

일자	내용
2024. 7. 16.	•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공모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제2항 벌칙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불가 등
2024. 7. 25.	• 공동주택 공용부분(관리사무소 등) 임시 사용 등 민원 발생 유의 • 현수막 및 안내문 등 게시 내용에 관한 사항(허위 사실 게시 주의)
2024. 8. 9.	• 선도지구 선정 공모 신청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 - 동의서 징구 시 주민 불편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등

- 앞으로도 선도지구 공모 추진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추가 시행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음.

□ 질 문 : 손준기 의원

○ 상동영상문화단지 관리 및 활용 관련

- 동춘서커스장 건물을 개발사업 시 철거해야 되는 것인지?
- 야인시대 세트장 등 유휴지 활용 계획은 없는 것인지?

□ 답 변

【동춘서커스장 철거 관련】

- 동춘서커스장은 2008년 공사 중단 이후 미준공 상태에서 지금까지 방치된 건축물로 현재 구조 및 안전상 취약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 보수보강과 건축물 준공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 추진 당시 특정 목적을 전제로 건축된 시설임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간 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구상을 하였으나, 추가 공사비 과다 문제점 등 시설 재활용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현재의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은 문화콘텐츠가 집약된 융복합 공간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와 토지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구조적 안정성과 범용성이 부족한 동춘서커스장을 존치하는 것은 복합개발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으로 사료됨에 따라, 서커스장은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시 부득이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을 양해 바람.

【유휴지 활용 관련】

- 우리 시는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 후 개발사업 추진 시까지 부지 활용을 위해 야인시대 세트장, 무형문화엑스포, 캠핑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델하우스 등 공유지 대부분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있음.
- 캠핑장은 소음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운영 적자 등으로 부득이 시설을 폐쇄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영구시설을 축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이 지연될 경우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제안하신 여러 방안을 포함하여 큰 비용 투입 없이 단기간에 시민들이 유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 질 문 : 손준기 의원

○ 부천대장신도시 가이설 송전철탑 관련

- 부천대장신도시 가이설 송전철탑 위치로 인한 대장안동네 주민들과의 갈등해소 방안 및 市의 향후 실질적 조치 계획은?

□ 답 변

- 부천대장신도시의 부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현재 대장신도시를 관통하는 154킬로볼트(kv) 송전철탑 2개의 라인을 2028년 8월까지 임시사용 및 이전하는 공사에 있어 우리 시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없이 대장안동네와 인접한 지역에 가이설 송전철탑이 위치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 우리 시는 민원발생 즉시 송전철탑 가이설 공사 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두 차례 긴급회의 및 면담*을 통해 민원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市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였음.

* (8. 19.) 지역주민-부천시-LH-시공사 참여 긴급회의 / (8. 26.) LH인천지역본부장 면담

- 이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두 차례 지역주민 회의**를 개최하였음. 앞으로도 우리 시는 본 현안이 해소될 때까지 9월 중 LH사업 공동대응 TF팀을 구성하여 관내에서 추진 중인 LH사업과 연계·대응해 나갈 것임.

** (8. 29.) 지역주민대표-LH계양부천사업본부장 협의 / (9. 2.) 지역주민대표-LH실무팀장 협의

- 우리 시는 주민동의 및 市와의 협의 없이 LH에서 일방적으로 송전철탑 가이설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향후에도 市와 지역 주민의 소통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 질 문 : 양정숙 의원

○ 관내 업체 우선구매 관련

- 관내 대장·역곡·원종지구 등 부지조성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관내 업체 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공문발송 건의)

□ 답 변

-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형 신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대형 개발사업 및 건축 공사기간 동안 관내기업·인력·장비·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부천형 신뉴딜정책 (2021. 11. ~ 현재)

- 대 상: 공공건축물,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민간건축공사
- 목 표: 총 공사비의 30% 이상 관내 활용
- 기 협약체결: 현대엔지니어링(주) 등 48개사(50억 이상 현장 대상)
- 협약체결 예정(2024. 9.) : 대장지구 토목공사(동부건설) 등 4개사

- 또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인 대장·역곡·원종 지구 등의 사업시행자인 LH에는 관내 업체의 자재, 인력 등의 적극 활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며, 우리 시와 LH임원 면담 시에도 관내 업체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市→LH공문발송) 3회(2024. 4. 30. / 2024. 6. 25. / 2024. 8. 14.)

(LH임원면담 건의) 3회(2024. 2. 신도시사업1처장, 계양부천사업본부장 / 2024. 4. 국토도시본부장 / 2024. 8. 인천지역본부장)

- 앞으로도 우리 시는 관내 기업의 자재 등이 우선 구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사업 및 주택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부서와 함께 독려 및 홍보해 나가겠음.

교 통 건 설 국

□ 질 문 : 윤병권 의원

○ 바닥형 보행신호등 점검 관련

- 바닥형 보행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오작동 문제 원인에 맞춰 대처 및 철저한 점검 요청

□ 답 변

-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교통안전과 보행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보호구역 등의 교차로 총 116개소에 설치하였음.
- 바닥형 보행신호등 오작동 주요 원인은 접속케이블 신호 오류로, 노면에 설치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충격과 결로 등에 취약함에 따라 고장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속케이블 접합부에 추가 방수 처리를 하는 등 시공 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 이에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 성능 및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설치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고장 즉시 현장 조치 및 하자보수를 진행, 중대한 하자(역신호 등) 발생 시 전면 재시공을 통해 보수하고 있음.
- 하자보수기간 만료 예정인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경우, 하자보수 만료 전 완료검사를 통해 정밀점검하고, 추후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단가업체를 통해 정비하고자 함.
- 또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작 업체 등에서 유지관리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관리에 더욱 집중하겠음.

□ 질 문 : 객내경, 양정숙, 이학환 의원

○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빌딩 근처 주차구역 관련

-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관련 대안 마련 및 정책 재검토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관련(다중이용시설 및 6층이상 고층 인근)
- 부설주차장(기계식 주차장) 관련

□ 답 변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관련】

- 우리 시는 406개소 9,338면(2024년 기준)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 내 설치·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시행 2018.10.25.) 제6조(주차장설비 기준 등)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소방 활동의 지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현장의 노상주차장은 2000년 9월경 설치되어 현재 야간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 중임.
- 금번 화재와 관련하여 우선 중·상동 상업지역 내 6층 이상 고층빌딩과 다중이용시설, 숙박업소 등에 인근한 노상주차장의 도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할 소방서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방 활동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곳은 노상주차장의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 현재 우리 시와 경기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로 “부천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사고사례분석,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 및 노상주차장 정책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향후 정비될 노상주차장 구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노외 주차장은 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노상주차장 정비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신중동 지역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관련】

○ 신중동 기계식주차장 주차면수 현황

(2023. 4. 1. 기준)

비고	운행			검사 후 미운행			미검사 미운행		
	개소	기수	면수	개소	기수	면수	개소	기수	면수
총 계	25	33	1,262	34	76	1,714	79	93	1,063
신중동(3층이하)	4	5	56	18	20	203	73	83	879
신중동(3층초과)	21	28	1,206	16	56	1,511	6	10	184

- 신중동 지역 기계식주차장의 전체 면수는 4,039면이며, 이 중 운행 면수는 1,262면, 검사 후 미운행 중인 면수는 1,714면, 미검사 미운행인 면수는 1,063면으로 총 2,777면이 미운행 중임.(미운행 비율 약 68%)

○ 신중동 내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이 저조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는 미운행 중인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주차장법 제19조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및 동법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규정에 의거 신중동 지역 79개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진행 중임.

○ 다만, 기계식주차장 정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지원 근거에 필요한 주차장법 개정 및 재정지원(국비)을 건의(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23. 5. 3.)하였으나, 검토기관(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은 공공재보다 사유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설치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음.(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23. 8. 29. 회신)

○ 한편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를 하고 필요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법정 주차면수)을 1/2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 방치된 신중동 지역 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 면수를 1/2로 완화 설치하는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상급 기관 (경기도 →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 의뢰('23. 3. 8.)하였으나 답변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조례 제·개정 추진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기계식주차장 사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질 문 : 김미자 의원

○ 포트홀 관련 시민 홍보, 보수 관련 개선 방안

- 포트홀 보수, 시민 홍보에 대한 기존 계획 및 변경 계획과 개선 방안
- 오정구 포트홀 보수 관련 문제 원인 파악 및 세부 현황

□ 답 변

【포트홀 보수 및 보상에 대하여】

- 포트홀은 포장 균열 발생부위에 우수침투 등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력을 상실하여 국부적으로 포장 표면이 파손되는 현상으로, 주로 도로 결빙 및 빗물 침투 등으로 내구성이 약화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 포트홀 발생에 따른 보수는 경미한 파손의 경우 자체인력을 통하여 보수하며, 중대한 파손은 전문 시공업체를 통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해빙기와 여름철 강우 기간에 선제적으로 집중 도로점검 및 도로정비공사를 실시하여 포트홀 발생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도로 파임(포트홀)·땅꺼짐(싱크홀) 처리 흐름도(붙임1 참고)

- 아울러, 계약된 도로공사 업체를 통한 포트홀 정비공사 시행 시 도로 포장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다짐, 노면도색 원상복구 등을 시공사에 강조하고 있으며, 포트홀 발생에 따른 자체보수 시 소형 콤팩터를 사용한 충분한 다짐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포트홀을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재파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포트홀 발생 현황(붙임2 참고)

- 또한 '24년 추경예산 및 '25년 본예산에 도로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부족으로 미정비 되는 부분이 없도록 도로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분	정비개소(건)	정비면적(m²)	사업비(천원)
당 초 ('24년 본예산액)	4,435	4,557	3,200,000
변 경 ('24년 1회 추경액)	5,916	6,078	4,268,260 (증 1,068,260)

- 포트홀 등 피해 배상 분야는 대부분의 도로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도로 관련 부서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도로의 하자여부, 사고 증빙서류 등을 검토 후 배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영조물 등으로 검색 시 공공시설물 관리부서(담당자 연락처) 등을 안내하여 신속한 접수 및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부천시 전체 영조물에 대하여 재산관리과에서 매년 일괄 가입

- 영조물 배상(2024.1. ~ 8.)은 총 121건(원미 61건, 소사 16건, 오정 44건)을 접수 처리 하였고 이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1,190만원을 지급하였음.

※ 영조물 배상 현황(붙임3 참고)

※ 영조물 배상 흐름도(붙임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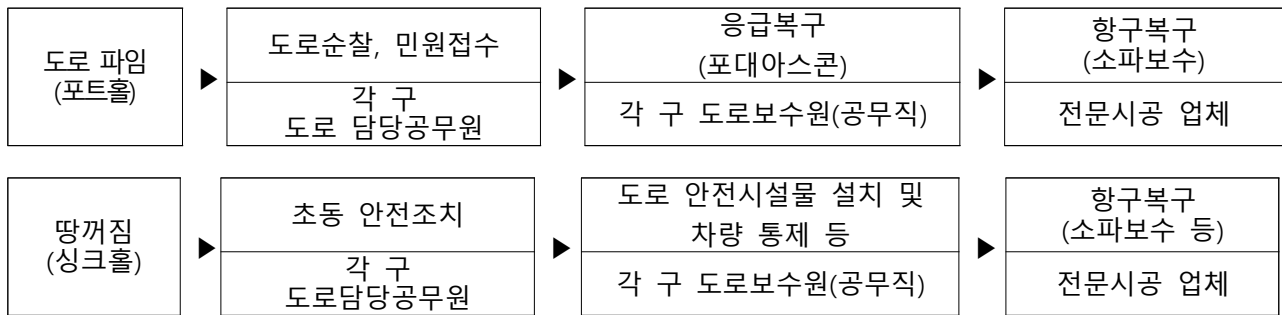
【오정구 포트홀 보수 관련 원인 및 세부 현황에 대하여】

- 오정구 관내에는 레미콘 생산공장 밀집지역, 물류단지,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도로의 파손 빈도 및 정도가 심한 실정으로 포트홀 발생 시 신속히 보수하고 있으나, 다수의 대형 중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특성상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도로 포장 면의 포트홀, 피로파괴, 부등침하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

- 아울러, 파손 범위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하는 도로의 경우, 도로보수원을 통한 자체보수 실시 후 신속히 계약된 도로공사 업체를 통하여 재정비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도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포트홀 등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형 중차량이 집중 통행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순찰점검 할 예정이며, 도로정비 공사 시행 시 콘크리트 포장 등 도로포장의 내구성과 유지관리 수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붙임1) 도로 파임(포트홀)·땅꺼짐(싱크홀)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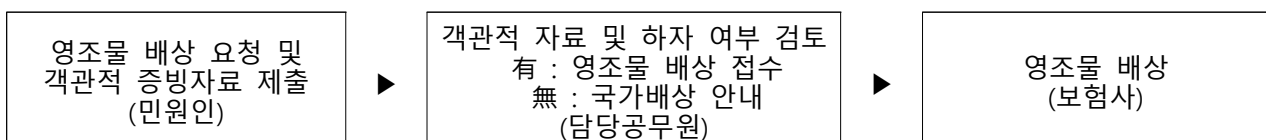
(붙임2) 포트홀 발생 현황(2024년 1월~8월)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도로 포트홀	계	정비개소	4,435	551	880	615	520	528	311	570	460
		정비면적(m²)	4,557	388	688	455	772	729	311	672	542
		정비금액(천원)	131,086	16,612	29,682	16,738	16,252	18,707	8,126	14,763	10,206
	원미구	정비개소	1,638	233	401	261	109	189	121	200	124
		정비면적(m²)	1,049	42	36	167	131	228	121	200	124
		정비금액(천원)	41,646	5,405	9,956	5,163	2,980	6,191	2,911	5,729	3,311
	소사구	정비개소	1,141	110	251	140	207	161	92	99	81
		정비면적(m²)	1,073	105	238	135	204	152	79	85	75
		정비금액(천원)	27,205	2,555	5,908	3,185	4,494	3,822	2,569	2,765	1,907
	오정구	정비개소	1,656	208	228	214	204	178	98	271	255
		정비면적(m²)	2,435	241	414	153	437	349	111	387	343
		정비금액(천원)	62,235	8,652	13,818	8,390	8,778	8,694	2,646	6,269	4,988

(붙임3) 영조물 배상 현황(2024년 1월~8월)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도로 영조물	계	배상 건수	121	10	16	16	23	17	23	12	4
		자기부담금 지급액(천원)	11,894	1,000	1,600	1,571	2,187	1,700	2,300	1,136	400
	원미구	배상 건수	61	4	6	9	13	9	14	4	2
		자기부담금 지급액(천원)	5,987	400	600	900	1,187	900	1,400	400	200
	소사구	배상 건수	16	1	-	3	4	2	2	3	1
		자기부담금 지급액(천원)	1,600	100	-	300	400	200	200	300	100
	오정구	배상 건수	44	5	10	4	6	6	7	5	1
		자기부담금 지급액(천원)	4,307	500	1,000	371	600	600	700	436	100

(붙임4) 영조물 배상 흐름도



□ 질 문 : 김미자 의원

○ 중앙분리대(차단봉 포함) 파손 및 방치로 인한 안전·미관 관리 관련

- 분리대(차단봉 포함) 파손 처리 현황
- 손괴된 분리대(차단봉 포함)에 대한 처리 방법 및 현황
- 분리대(차단봉 포함) 주변 잡초 및 쓰레기 결집, 이로 인한 안전·미관 저해에 대한 부서 의견 및 개선 방안

□ 답 변

【분리대(차단봉 포함) 파손 처리 현황】

- 부천시 관내 중앙분리대는 부흥로 등 52개 노선 42,148m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분리대 파손 처리는 218건, 시선 유도봉 649건, 블라드(인도변) 187건으로 확인됨.

- 중앙분리대 파손 현황(1월~8월)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중앙분리대 파손 민원 접수(건)	계	218	20	31	43	12	18	16	48	30
	원미구	111	9	14	21	7	5	7	27	21
	소사구	76	5	11	15	5	9	6	17	8
	오정구	31	6	6	7	-	4	3	4	1

- 시선유도봉 파손현황(1월~8월)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시선유도봉 파손 민원 접수(건)	계	649	57	68	74	86	103	79	89	93
	원미구	319	25	24	32	48	50	34	55	51
	소사구	222	24	34	26	28	28	40	12	30
	오정구	108	8	10	16	10	25	5	22	12

- 블라드(인도변) 파손현황(1월~8월)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블라드 파손 민원 접수(건)	계	187	21	16	30	21	21	29	30	19
	원미구	78	5	6	12	13	6	13	13	10
	소사구	81	11	6	6	7	12	15	16	8
	오정구	28	5	4	12	1	3	1	1	1

【손괴된 분리대(차단봉 포함)에 대한 처리 방법 및 현황】

- 도로안전시설물(차선분리대, 시선유도봉, 볼라드)는 대부분 차량 추돌에 의한 사고로 현장 확인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철거 조치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특정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음.
- 경찰 수사 의뢰 후 사고 원인자 특정 시 원인자 복구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손괴자 미특정 시에는 계약된 도로안전시설물 전문업체를 통해 정비하고, 파손이 경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하고 있음.

【분리대(차단봉 포함) 주변 잡초 및 쓰레기 결집, 안전·미관 저해에 대하여】

- 중앙분리대 및 도로상에 발생한 잡초 등은 도로보수원을 통해 제초작업 및 쓰레기 등을 수거 처리하여 도로 미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미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 등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잡초제거 등 정비토록 하겠음.

참고자료

차선분리대 전수조사 실시

□ 추진개요

- 조사기간: 2024 8. 8. ~ 8. 30.
- 점검대상: 부천시 관내 차선분리대 설치지
- 조사내용
 - (설치연도) 내구연한 관리를 통한 노후 차선분리대 확인
 - (설치형식) 독립형/연결형 구분을 통한 전도사고 우려구간 점검
 - (설치연장) 연장에 따른 교체비용 검토
 - (설치상태) 파손 정도에 따른 교체 우선순위 선정

□ 조사결과

- 관내 설치지 52개 노선 점검완료 (229개소, 설치연장 42,148m)
- 설치형식: [독립형] 182개소, [연결형] 47개소
- 설치상태: [양호] 194개소, [보통] 23개소, [불량] 12개소

구분	총 개소	설치형식 (개소)		설치상태 (개소)
		독립형	연결형	
합계	229	182	47	양호194 / 보통23 / 불량12
원미구	155	129	26	양호130 / 보통16 / 불량9
소사구	44	25	19	양호42 / 불량2
오정구	30	28	2	양호22 / 보통7 / 불량1

- [불량] 차선분리대 12개소 1,990m 순차적 정비 실시

※ 정비예산 199,000천원 소요[1,990m * (1m당 약100,000원)]

□ 질 문 : 최옥순 의원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위치 개선 요구 관련

- 유효보도폭이 좁은 경우 설치 위치 개선 필요
- 보도폭에 따른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

□ 답 변

【방호울타리 설치 위치 개선에 대하여】

- 소사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및 경찰서 요청에 따라 2023년 8월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보도 내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버스 등 대형차량의 통행에 따른 파손 및 전도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앙카식이 아닌 매립형으로 설치하였음.
- 동 지역은 협소한 보도 및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보도 여유 폭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 확장 및 방호울타리를 이설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5년 본예산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금지,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보차도를 구별하여 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 향후 학교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방호울타리 설치 시 최대한 보행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도로시설물을 검토하여 설치하겠음.

□ 질 문 : 임은분 의원

○ 사유지의 도로 건설 문제 관련

- 사유지에 도로가 건설될 경우 토지주와의 해결 방법 및 계획
- 사유지 도로 사용료 지급현황

□ 답 변

【사유지에 도로가 건설될 경우 토지주와의 해결 방법 및 계획】

- 도로개설사업은 교통 흐름 개선, 안전성 강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이루어지며, 사유지 포함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미지급용지)의 경우도 토지 보상법에 따라 명시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
- 현재 미지급 용지는 심곡본동 530-375 등 3필지로, 2021년 예산편성 후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사유지 도로의 사용료는 해당 토지가 예전부터 사실상 일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인접 토지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소유자의 이익, 편익, 토지의 위치 형태 등)의 유무에 따라 사용료 지급이 결정되는 등 정량적 판단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법적 판단을 통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유지 도로는 12필지이며, 향후 사법부의 사용료 지급 결정 시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할 계획임.

【미지급 용지 및 사유지 도로 사용료 지급현황】

○ 미지급용지 현황

연번	노선명	지번주소	면적(m ²)	사용료 또는 부당이득금	비고
1	소로2-594호선	심곡본동 530-375	10	해당없음	
2	대로1-2호선	내동 222-171	1,002	해당없음	
3	소로2-1호선	원종동 178-16	42	해당없음	

○ 사유지 도로 사용료 지급 현황 (2020. 1. ~ 2024. 8.)

연번	지번주소	부당이득금(원)	비고
1	원미동 162-158	10,072,210	
2	역곡동 173, 387-8	8,157,870	
3	도당동 58	2,044,000	
4	원종동9-10,23,82	39,583,220	
5	고강동171-2,3,4, 원종동7-1	5,210,270	
6	심곡본동 562-417	2,373,330	
합계(총 12필지)		67,440,900	

□ 질 문 : 임은분 의원

○ 사유지 점멸등 이전 문제

- 소사본동 350-3번지 사유지 안의 점멸등 이설 관련

□ 답 변

- 2024년 상반기 당 부지에 대해 협의 시 민원, 사고 등에 따른 유지보수를 우선 조치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 연말에 철거 및 이설이 가능함을 건축주에게 알린 바 있음.
- 다만 전반적으로 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하여 2024년 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추경 완료 시 9월 중으로 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보 건 소

□ 질 문 : 윤단비 의원

○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만성 적자 및 운영구조 개선 관련

-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의 만성적자로 인해 수탁자가 계약 포기를 선언한 상태임. 근본적 원인분석 및 운영평가는?
- 수탁기관의 경영 능력은 물론, 부천시의 공공의료 책임과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등 운영구조의 변화가 필요해 보임. 재위탁 시 적자개선 및 운영구조의 변화 방안은?

□ 답 변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적자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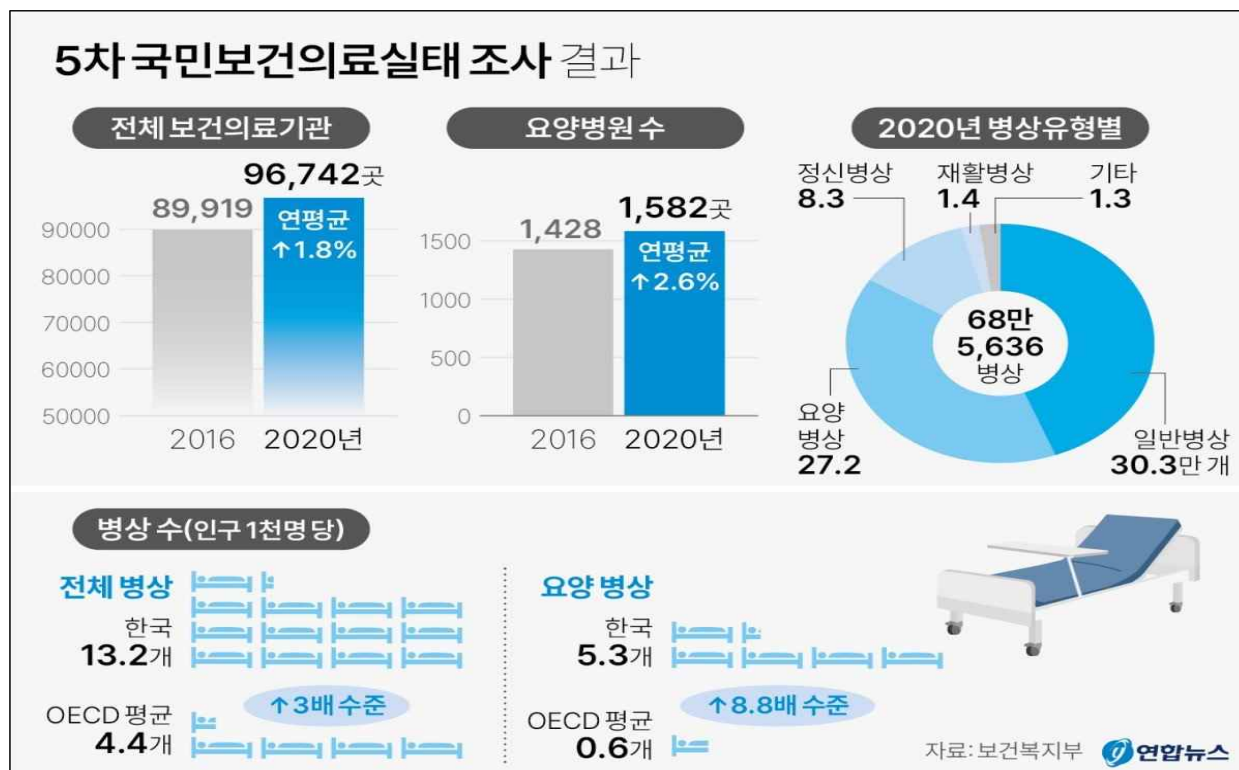
- 2022. 7. 15. 보건복지부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연평균 ('16년 ~ '20년) 2.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3.9%로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임.
-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수는 5.3개로 OECD 평균 0.6개와 비교하여 8.7배 많음.
-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68만 5,636병상)중 요양병상이 총 27만 1,999병상으로 전체 병상수의 약 40%를 차지함.
- 전국 요양병원은 2010년 867개소, 2011년 976개소, 2016년 1,428개소, 2020년 1,582개소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되는 추세였으나, 2021년 1,462개소, 2022년 1434개소, 2024년 현재 1,364개소로 감소되는 추세임.

구분	2010	2011	2016	2020	2021	2022	2024
전국 요양병원	867개소	976개소	1,428개소	1,582개소	1,462개소	1,434개소	1,364개소

- 부천시 요양병원은 2010년 19개소 3,538병상, 2024년 현재 18개소 병상 4,270병상으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개원 된 2010년보다 현재 개소수는 1개 감소했으나, 병상수는 732병상이 늘어나 2010년 대비 병상수가 20.6% 증가하였음.

구분	2010	2024.7.기준	증감
부천시 관내 요양병원 개소수	19개소	18개소	1개소 감소
부천시 관내 요양병원 병상수	3,538병상	4,270병상	732병상 증가

- 2023. 8.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2027년 요양 병상이 31만 3천병상 공급이 예상되어, 약 2만개의 병상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함.



※자료: 2022.7.14.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결과 연합뉴스

- 요양병원 병상과잉으로 병원 간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민간요양 병원의 간병비 할인 등으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민간병원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입원환자 수가 감소되고 병원수익의 감소가 발생함.
- 또한 COVID-19 이후 요양병원의 고령환자의 사망, 신규 입원환자의 감소 등에 따라 병상가동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병상 가동율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입원환자수 (월평균)	221명	206명	210명	213명	196명	188명
병상수	246병상	246병상	243병상	243병상	243병상	234병상
병상가동율	89.8%	83.7%	86.4%	87.6%	80.6%	80.3%

- 더불어,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율에 비해 요양병원의 의료수가의 인상율이 낮아 수익대비 지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병원의료수가 인상을 소비자물가지수,최저임금 인상을 비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병원의료수가 인상을	1.6%	1.4%	1.6%	1.9%	1.6%
소비자 물가지수	2.5%	5.1%	3.6%	2.8%	3.5%
최저임금인상을	1.5%	5%	5%	2.5%	3.5%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수익과 인건비 비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의료수익	8,976,765천원	9,270,140천원	7,675,231천원	
인건비	5,667,789천원	6,284,686천원	5,875,323천원	
인건비 비율	63.1%	67.8%	76.5%	
지급인원	133명	127명	115명	

※ 자료: 2021~2023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결산서

- 또한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은 준공(2009년)후 15년이 경과하여 시설 및 장비·물품 노후화로 수리·수선비의 지출이 매년 증가함. 시에서도 노후 시설의 수리·수선 및 노후 의료장비 등의 교체를 위해 매년 예산 편성을 하여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 시설 연면적이 14,691.4㎡, 지하1층 및 지상 5층 대규모 시설로 건물 노후로 수선비용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물품의 수리 및 교체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 부천시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이 하나의 건물에 위치한 복합시설로 공용 공간사용 및 관리를 위한 공통경비(미화·시설관리 등 공통 인건비, 시설 수리·수선비, 공공요금(전기·수도요금 등))를 각 시설별 배분함에 따라, 요양원의 공통경비 부담 추가 발생으로 타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지출이 많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함.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수선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병원 수선비	65백만원	112백만원	156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액	15백만원	47백만원	44백만원	

※ 자료: 2021~2023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결산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운영평가】

-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공립요양병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도모하며, 지역 내 노인 관련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실시되고 있음.
- 운영평가의 항목은 공립요양병원의 진료 및 운영실적, 공공보건사업의 추진성과와 그 밖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상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수행 중임.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20년과 2022년 2년 주기로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의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받았고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2020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영역별 결과 중 진료서비스 부분의 적정의료인력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0.3명으로 전체 평가기관(32개소) 평균 30.7명과 유사하였고,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3.8명으로 전체 평가기관(32개소)의 평균 4.2명보다 다소 적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평가됨.
 - 2020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종합점수는 82.0점으로 전체 평균 77.0점보다 높게 평가됨. 특히 평가 부문 중 양질의 의료부분에서 전체 공립요양병원 평균 점수 39.2점보다 6.2점 높은 45.4점으로 평가됨.
 - 2022년 운영평가 결과 중 진료서비스 부분의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97.6점으로 전체 평균 74.5점, 유사규모기관 평균 77.4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2020년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의사 및 간호인력,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의료인력을 유지하여 높게 평가됨.
 - 2022년 운영평가 종합점수는 93.7점으로 전체 평가 기관에서 최고점으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전체 공립요양병원 평균 점수 75.6점보다 18.1점이 높은 점수임.

- 위의 보건복지부의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평가한 결과이므로 신뢰도가 높으며, 타 공립요양병원과 평가지표별로 비교가 가능함.
- 현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24년 3주기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대상 기관으로, 지난 6월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의 현지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 평가결과는 올해 11월 이후에 발표될 예정임.

< 참고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의료인력 현황 >

※ 의사 및 간호인력 등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사,간호인력 1명이 돌보는 환자 수에 따라 산정한 등급

2020년 운영평가 (2019년 심평원 등급기준)	의사등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천시립 (의사1인당 환자수)	1등급 (31.9명)	1등급 (30.8명)	1등급 (30.5명)	1등급 (28.1명)
	32개소 평균 (의사1인당 환자수)	1등급 (30.5명)	1등급 (30.8명)	1등급 (31.0명)	1등급 (30.5명)
	간호인력등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천시립 (간호사1인당 환자수)	1등급 (3.7명)	1등급 (4.4명)	1등급 (3.7명)	1등급 (3.7명)
	32개소 평균 (간호사1인당 환자수)	1등급 (4.2명)	1등급 (4.2명)	1등급 (4.2명)	1등급 (4.2명)
	의사등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2년 운영평가 (2021년 심평원 등급기준)	부천시립 (의사1인당 환자수)	1등급 (32.5명)	1등급 (30.5명)	1등급 (33.4명)	1등급 (33.1명)
	34개소 평균 (의사1인당 환자수)	1등급 (29.5명)	1등급 (29.1명)	1등급 (28.3명)	1등급 (29.5명)
	간호인력등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천시립 (간호사1인당 환자수)	1등급 (4.1명)	1등급 (4.1명)	1등급 (4.2명)	1등급 (4.1명)
	34개소 평균 (간호사1인당 환자수)	1등급 (4.1명)	1등급 (4.0명)	1등급 (4.0명)	1등급 (4.1명)

※ 자료: 2020, 2022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평가 보고서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現위·수탁계약서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따라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운영과 시설의 개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병원의 정책방향,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목적으로 기관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병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 대표, 회계 전문가 등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2024.6.14.기준 병원장,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팀장 및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한 8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병원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병원 회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안전을 심의하고 있음.

【재위탁 시 적자개선 및 운영구조의 변화 방안】

- 우리 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의 수탁자의 민간위탁 중도 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음.
- 첫째, 노후된 시설 및 운영물품·장비의 개선을 위해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수리·수선 및 노후 된 의료장비 및 운영 물품 등의 점진적 교체를 통해 차기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음.
- 둘째, 우리 시와 동일하게 수탁기관의 운영 적자로 인한 계약을 중도 포기했던 타 지자체 재계약 체결 시 개선사항 등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재위탁 계약 체결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 셋째, 2019년부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해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운영 중인 ‘저소득층 대상 24시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시립병원으로서의 공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 넷째, 2024. 1. 31. 지정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의 치매안심병동 운영을 통해 민간요양병원과는 차별화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천시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의 책임과 역할 수행을 지원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퇴원환자 거주지 개선, 퇴원환자를 위한 방문간호 및 보호자 상담 등 병원 퇴원 후 추후 관리를 통해 퇴원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 추진하겠음.

□ 질 문 : 윤단비 의원

○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약제비 미지급 관련

- 2023년도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조기 중단으로 고혈압·당뇨병 지원 사업 미지급은 약 25만 건으로 파악됨. 올해는 10만 건 이상 미지급 조기 중단될 예정임. 부천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가속화되어 지원 대상자가 급증하는 상황임.
-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대응 방안은?

□ 답 변

【경기도 고혈압·당뇨병센터 예산운영현황】

경기도 (5개시)	재 정 자립도 (%)	65세 이상 인구수 (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7.31.기준 자료)		예산액 (천원)	추가 시비 예산액 (천원)	지원중단 시기
			등록자수 (실인원)	재등록률 (%)			
부천시	28.5	134,331	91,333명	75.6	1,377,180	-	11월중순 중단
광명시	34.8	46,870	39,691명	49.47	565,640	35,000	10월중단
남양주시	30.6	121,931	85,948명	49.2	1,580,780	430,000	중단없음
하남시	47.8	48,583	30,956명	48.6	436,800	230,000	중단없음
안산시	34.6	87,389	73,445명	44.85	1,234,500	290,000	11월중순 중단

- 국비 50%, 시비50% ‘시범사업’ 으로 구조적 예산 증가 규모에 맞지 않는 관리대상 증가로 매년 미지급금 발생규모 상승하고 있는 사업

【미지급금 발생규모 상승으로 질병관리청의 지침변경사항】

- 당해 예산 부족분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소급하여 지급
- 2023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배, 보조금 비용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소급 지급 금지로 인한 지원중단 발생

【사업 연속성을 위한 대응방안】

○ (질병관리청): 운영관련 지침 변경 요구

- 지자체별 특성(인구 수, 예산 운용 현황 등)에 맞게 운영 가능하도록 자율권 위임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인센티브(진료비, 약제비, 등록비) 지원 대상 연령 조정
- 인센티브(진료비, 약제비, 등록비) 지원 중 일부 항목만 지원

○ (부천시)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중단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 콜센터운영, 부천시 의사회·약사회 등 커뮤니티 공지, 등기우편, 유선안내, MMS(장문문자) 발송, 홈페이지 게시등
-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부족 분 추가 시비 편성

□ 질 문 : 윤단비 의원

○ 부천 더블유(W)진병원 강박 환자 사망사고 관련

- 사건 발생 직후 부천시는 ‘의료행위 위법 여부를 따질 권한은 없고, 병원 쪽은 격리·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의견을 피력함.
- 행정의 감독 권한을 통해 안전을 수호하는 게 보건소의 책무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지침에 대한 행정지도만 당부되고 있는 실정임.
- 부천시의 ‘격리 및 강박지침’ 관련 행정지도와 재발 방지 대책은?

□ 답 변

【부천시 정신의료기관 관련 지도점검 현황】

- 우리 시는 매년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에 의거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지도점검내용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충족 여부, 입·퇴원 관리의 적정 여부, 진료기록부 등 기록보존 여부 및 환자 권리 고지 등 행사 여부 등임.
- 올해는 하반기에 관내 정신의료기관 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부천시 ‘격리 및 강박지침’ 관련 행정지도와 재발방지 대책】

- 관내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지침 준수, 환자 권리 고지 및 격리·강박 시행 등 정신의료기관 내 자체 직원 교육 실시, 격리·강박 수행자 인권교육 독려 및 이수 확인 등 행정지도 예정임.
- 관내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정신건강복지법 및 격리 및 강박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음.

□ 질 문 : 손준기 의원

○ 부천시보건소 후보지(여월동→소사경찰서부지) 변경 사유

- 소사경찰서 부지와 기존 시유지의 교환과 관련, 기존 시유지 선정 기준
- 부천보건소 후보지가 여월동에서 소사경찰서 부지로 변경된 사유

□ 답 변

【구)부천소사경찰서 부지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 시유지 선정 기준】

- 송내동에 위치한 舊부천소사경찰서가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舊부천소사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할 계획임.
- 우리 시에서는 교환을 통한 국유재산 취득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찰청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 기획재정부와 교환 업무 추진 과정에서 2024. 3. 25.자로 송일·오정치안센터 폐지, 원미·약대 지구대 신축부지 변경 등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변경되어 최종 교환 대상 공유재산이 선정되었음.

【부천시보건소 이전신축 사업대상지 선정관련】

- 2023년 ‘부천시보건소 신축이전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4개의 후보지[現)부천시보건소 부지, 舊)소사경찰서 부지, 여월동 부지, 역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사업 대상지 평가분석을 통해 舊)소사경찰서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용역 중간보고 시, 여월동 부지가 유리하게 나왔지만, 당시에는 기본적인 이론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점수화가 아닌 상·중·하로 적용한 것으로 당시 사업대상지의 현장조사와 수요 변화 여부 등 세부적인 검토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중간보고 후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와 평가항목에 대한 선정, 용역사 연구진의 의견, 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용역사에서 최종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분석한 결과임.

○ 부천시보건소 사업대상지 평가분석방법

- 전문가(5명)를 통한 대상지 평가 설문조사와 각 평가지표* 문항별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설문조사 등 2회의 조사를 통해 대상지 선정함.

* 평가지표: 확장성(부지확장성), 접근성(대중교통 접근성, 지리적 중심성), 경제성(부지매입비, 리모델링 가능성), 개발용이성(부지확보 용이성)

- AHP는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으로 분류하고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 중요도를 선정함에 있어 다각적으로 다양한 기준을 통해 결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주로 전문가를 통한 설문을 실시하며, 설문을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주관적 결정이 개입할 수 있어 5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설문을 실시

- 중간보고 사업대상지 평가지표 항목

- 지표선정은 공공시설의 입지이론을 근거로 한 평가기준과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1차 설정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내 용	평가내용
확장성	확장성	부지 면적	• 입지 후 미래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장 가능성 판단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버스정류장 수	•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를 통해 접근성을 판단
	지리적 중심성	2025년 사업대상지 행정구별 추정인구	• 미래 인구 수를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판단
중복성	공급중복성	반경 1km 내 병의원 수	• 주변 동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분포로 공급의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경제성	개발비용	철거비, 부지매입비 등	• 부지확보, 지장물에 따른 비용 발생을 통한 경제성을 판단
	필요충분성	경사도 비율	• 해당부지 경사도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가능성을 판단
개발 용이성	부지확보 용이성	국·공유지, 사유지 비율	• 국·공유지, 사유지 비율에 따른 부지 확보 용이성을 판단

- 최종 사업대상지 평가지표 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 자료	평가 내용
확장성	부지 확장성	-부지면적(m ²)	• 입지 후 미래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확장가능성 판단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후보지와 인접 버스정류소 도보 소요시간 및 전철역, 버스 정류장 개수(도보 10분 이내)	• 대중교통을 이용 대상지의 접근성을 판단
	지리적 중심성	-사업대상지가 속한 반경 1.2km에 속한 법정동의 준공시점 인구 수	• 미래 인구 수를 통해 효과적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
경제성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용	• 부지확보, 비용절감 등의 경제성을 판단
	리모델링 가능성	-리모델링 가능 건축물 및 건축물 연면적	• 리모델링으로 인한 비용 절감 가능성 평가
개발 용이성	부지확보 용이성	-국·공유지 및 사유지 비율	• 부지확보 용이성을 판단

- 최종 평가지표 항목 변경 사유

- 공급 중복성 평가항목은 보건소의 이용 수요자는 병·의원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공급 중복성을 병의원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연구진의 의견으로 자원 활용성으로 변경하였으나, 자문위원 평가설문 이후 자문위원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공급 중복성 평가항목에서 제외
- 필요충분성 평가항목은 구릉지 발생 시 추가공사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성 항목에 넣었으나 송내동 601 부지는 구 소사경찰서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분리하여 건물 신축 시 경사도로 인한 공사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건축사 측에 확인되어 경제성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 지방청사의 경우, 호화청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타당성 용역 시 리모델링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절감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리모델링 가능성을 경제성 항목에 추가
- 리모델링 가능성 평가항목은 부천시보건소 부지에도 해당되는 항목이며, 소사경찰서 부지와 여월동 부지의 리모델링 가능성 점수 차이 (0.055점)는 각 부지의 전체 점수의 0.8~2.1%로 큰 비율이 아니므로, 리모델링 항목이 소사경찰서 부지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 질 문 : 이종문 의원

○ 부천 호텔 화재 사건 관련 - 공공의료원 설립

- 그동안의 시의 입장은 충분한 병상수와 충분한 대형 병원이 존재한다는 판단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하여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왔음.
- 이번 사고에서 나타나듯이 대형사고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부천시는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부천시민의 안전을 준비하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일이므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처해야 할 것임.

□ 답 변

【재난 발생 대응을 위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 부천시는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임.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음.
-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부천시의 응급의료시설 현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3년 3월 기준 인천권역 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순천향대부천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3개가 지정되어 있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해 부천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시흥시가 인천권역으로 지정되어, 권역응급의료기관 3개가 적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2022년 12월 기준 부천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과 부천세종병원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인구백만명당 2.54개로 경기도 2.35개 대비하여 많은 수준임.

- 부천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의료법인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인구백만명당 1.27개로 경기도 2.57개 대비하여 적은 수준임.
- 2023년 3월 기준 부천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기관 4개(권역응급의료센터 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의 응급실 병상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28병상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부천성모병원 37병상, 부천세종병원 20병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다니엘종합병원 10병상이 있음.

<부천시 응급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종별	응급지정	응급실 병상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상급종합	권역응급의료센터	28	10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37	9
부천세종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0	7
의료법인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0	3

※ 자료: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3.12.)

-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부천시 응급의료시설 현황분석 결과, 현재 부천시 응급의료기관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소 수 및 병상 수 모두 양적으로 증대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다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1개소만 지정되어 있으며 200병상 미만 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응급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부천형 공공의료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설립 할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15병상을 설치하여 감염 등 재난 발생 시 재난의료대응센터 전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는 향후 부천시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경우 위 연구용역의 설립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임.

【호텔 화재발생 관련 부천시보건소 환자 이송 조치사항】

- 이번 부천호텔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환자이송은 중앙응급 의료 센터상황실과 부천소방서 및 재난현장 인근 40km이내 의료기관 응급실 담당자 간 모바일 상황실을 개설하여 관할구역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이송 가능 의료기관을 파악하여 119 구급대와 현장응급의료소(이송반)에 전달 되면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함.
- 당일 부천시보건소 현장응급의료소 의료진은 환자상태 분류 후 중앙 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을 통해 이송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순천향 대학교부천병원과 부천성모병원에 소방당국 협조 하에 사상자를 이송 하였음.
- 추가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부천세종병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모바일상황실 및 현장 신속대응반원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 당시 응급실 병상이 부족함을 확인한 후 인접 지역 이송 가능한 의료 기관으로 사상자 이송 후, 세종병원 응급실로부터 사상자 수용이 가능 하다는 답변을 듣고 추가 사상자 발생 시 이송 예정이었으나, 추가 사상자 발생이 없었음.

■(참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15.12.18.>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응급의료권역	응급의료권역 구성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1	서울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2	서울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2
3	서울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2
4	서울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2
5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6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2
7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부천시, 시흥시	3
8	광주	광주광역시, 전남(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고창군, 순창군)	2
9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무주군)	2
10	울산	울산광역시	1
11	경기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1
12	경기동북	의정부시, 철원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1
13	경기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2
14	경기동남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2
15	강원영동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1
16	강원춘천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경기(가평군)	1
17	원주충주	강원(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경기(여주시), 충북(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1
18	충남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1
19	충북청주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1
20	전북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1
21	전북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
22	전남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1
23	전남순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	1
24	경북안동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1
25	경북구미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상주시	1
26	경북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1
27	경남창원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1
28	경남진주	진주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1
29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

공 원 사 업 단

□ 질 문 : 손준기 의원

- 기후 위기 대응, 열섬현상 완화, RE100 실천 등을 위한 부천시 옥상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

□ 답 변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건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냉난방 사용 증가 대비 탄소 발생량이 증가하고 도심 열섬현상이 가중화되고 있음.
- 옥상 녹화는 건물 표면에 그늘을 제공하여 태양빛이 건물 표면에 바로 닿는 것을 막아주며 녹화된 건물의 표면 온도를 최대 11~25℃ 낮추는 효과가 있음.

< 옥상녹화에 따른 건물 표면온도 차 >

구 분	적용유형	적용시기	녹화표면/콘크리트표면 온도차(℃)
1	경량형(토심10cm+식생)	하절기 일일 최고	-21.1
2	경량형(토심15cm+식생)	하절기 일일 최고	-22.0
3	경량형(토심20cm+식생)	하절기 일일 최고	-22.7

[출처] 옥상녹화 지원사업-서울정책아카이브(<http://seoulsoution.kr>)

-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물 옥상녹화 조성시 건물의 구조안정성 문제, 초기비용 과다, 설치공간 확보, 관리 운영 비용 과다 발생으로 옥상녹화 보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설치공간 확보 및 관리 운영이 용이한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옥상녹화를 조성하고 열섬현상 완화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열린 공간을 제공해 오고 있음.

< 옥상녹화 사업 추진현황 >

(단위 : 억원, m²)

연도별	사업명	공공기관명	사업비	면적
2024	공공시설 옥상녹화	오정구청(서측)	2.45	800
2023	공공시설 옥상녹화	별빛마루도서관	3.00	1,0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원도심 공공시설 옥상녹화 조성	오정구청(동측)	1.78	500

- 또한, 농업적 활용이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자텃밭 조성 사업(옥상 공간 포함)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 공동체 단체에 텃밭 운영에 필요한 재료(모종, 비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음.
- 향후 공공시설외 일반건물에 대해서 우리 시는 「부천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하여,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크거나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에 대해 옥상녹화 조성사업을 추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상자 텃밭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등을 활성화하여 대기 오염, 도시 열섬화 감소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음.

〈 옥상녹화 조성사업 〉

- 사 업 량 : 연도별 5개소
- 사업대상 : 조성가능 면적 99㎡ 이상인 건물,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 조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 업 비 : 5억원(㎡당 325,000원)
- 지원범위 : 시비 20%, 자부담 80%
- 지원내용 : 건물 옥상에 식재기반 조성 및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 『부천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질 문 : 양정숙 의원

○ 소사대공원 확장 공사 및 한미재단 4-H훈련농장 관련

- 한미재단 건축물 일부를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공원으로 조성 요청
- 이와 관련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 답 변

- 238호 공원 부지 내 한미재단 건축물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양성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정책자문(2023. 5. ~ 8.)을 받아 한미재단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재검토 하였으나 불가능으로 확인됨.

※ 불법건축물은 등록문화재 지정 불가 및 등록된 사례가 없음.

- 이에 향후 238호 공원 조성 시 불법 증축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물 수선 후 한미재단을 테마로 한 활용방안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 아울러 향후 기존 소사근린공원과 238호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가칭) 소사대공원으로 확대 조성함으로써 소사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겠음.

□ 질 문 : 최옥순 의원

○ 평지둘레길 조성 요청 관련

- 원미산, 성주산 둘레 등을 활용하여 평지둘레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 답 변

- 부천둘레길 1, 2코스는 기존의 자연발생 등산로를 활용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되었음.
- 둘레길 1코스 원미산의 높이는 167m, 2코스 성주산의 높이는 218m로 비교적 낮고 험하지 않은 산으로, 평탄한 등산로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이용중임.
- 이에 따라, 현재 원미산·성주산의 관리 방향은 산림훼손 발생 및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는 신규노선 조성을 최소화하고, 기존 둘레길을 수시 정비하여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더불어,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원미산·성주산 내 유아숲체험원 총 5개소 조성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산림 내 노약자와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객 등 보행약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미산림욕장, 누구나숲길, 철쭉동산 무장애나눔길 등 무장애데크를 조성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숲을 쉽게 접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지둘레길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무장애데크길, 공원 내 산책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사진(원미산 등산로 및 원미산림욕장)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

